

인권정보자료실  
CPe1.25

# 다 죽여라 다 쓸어버려라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에 관한 짧은 기록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다 죽여라, 다 쓸어버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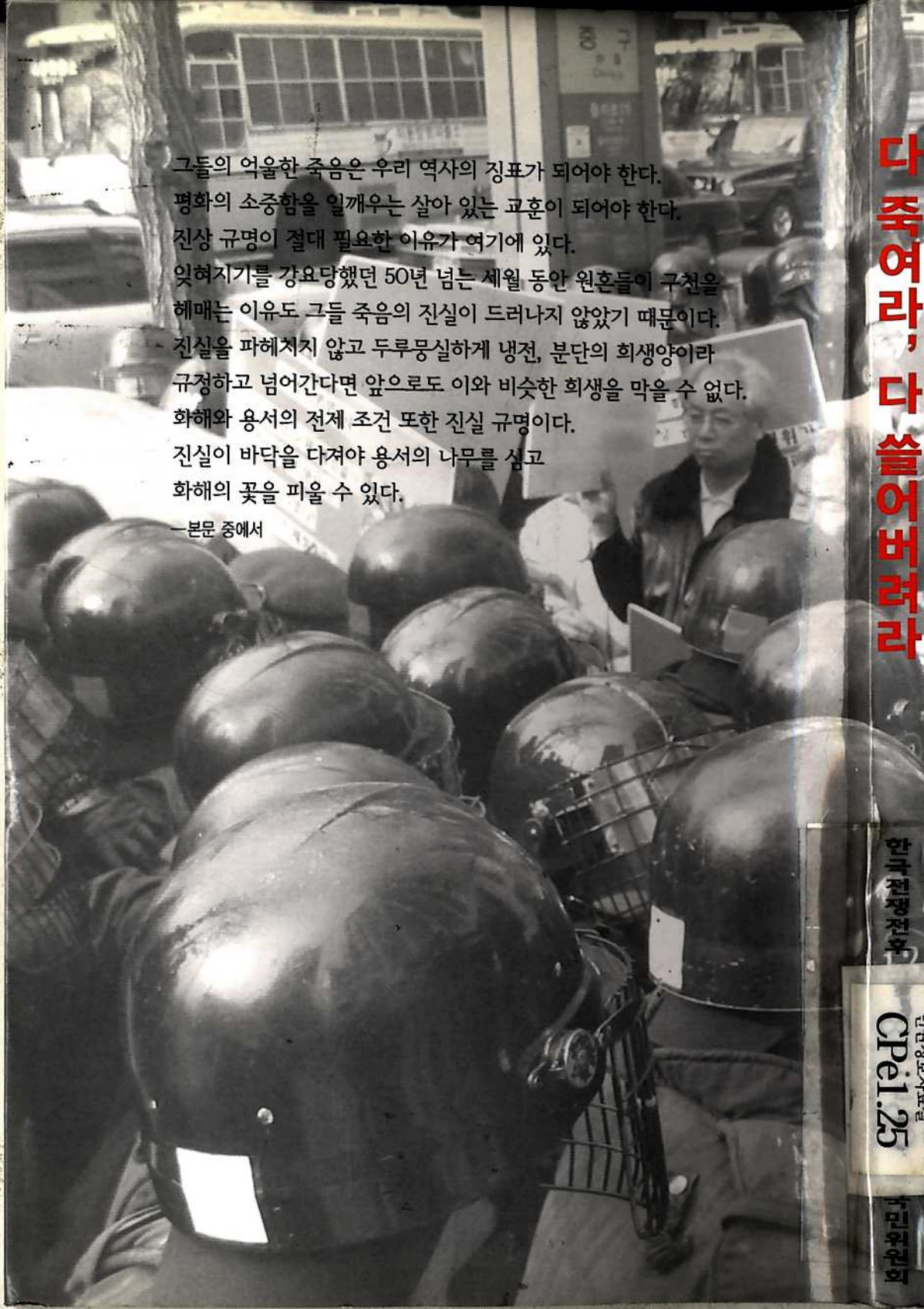
한국전쟁전후

인권정보자료실  
CPe1.25

범국민위원회

그들의 억울한 죽음은 우리 역사의 징표가 되어야 한다.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살아 있는 교훈이 되어야 한다.  
진상 규명이 절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잊혀지기를 강요당했던 50년 넘는 세월 동안 원혼들이 구천을  
헤매는 이유도 그들 죽음의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실을 파헤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냉전, 분단의 희생양이라  
규정하고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희생을 막을 수 없다.  
화해와 용서의 전제 조건 또한 진실 규명이다.  
진실이 바닥을 다져야 용서의 나무를 심고  
화해의 꽃을 피울 수 있다.

—본문 중에서







한국전쟁 전후 전국적으로 자행된  
 학살 사건의 진상 규명과 무고한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통합  
 특별법은 분명히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에 그 입법 목적을 두었지,  
 금전적인 보상이나 가해자의 처벌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우리는 새로운 분열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첫째는 그 진상을 옳게  
 파악하고 명예를 회복하여 적어도  
 선언적 의미로라도 인권 국가의 대열에  
 들어서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임을  
 세계에 과시해야 한다. 또 이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통일 시대에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바르지 못한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민족이나 국가는 밝은 미래를  
 보장하지 못할 것이다.

〈책을 펴내며〉 중에서

다 죽여라, 다 쓸어버려라

서준식님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인권사회 첫걸음이다!

전쟁학살규명범국민위 -

다 죽여라, 다 쓸어버려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대한민국헌정회  
- 1988년 12월 25일 제정

## 오늘, 왜 민간인 학살 문제인가?

- 이이화(역사학자, 상임 공동대표)

내가 잘 아는 강수의 선생(전 장흥 문화원장)은 나와 오랜 친분을 가지고 있다. 그분의 연세가 현재 88세니까 나의 아버지뻘이 된다. 그분은 만년에 장흥 동학혁명에 관련된 유적을 꾸준히 발굴하고 사진을 찍어 기록을 남기는 일에 몰두했다. 그분이 보도연맹에 관련되었다는 사실은 뒤늦게 알았다. 그분은 “이 선생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그에 관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고 했다.

그럴 것이다. 당신 자신은 물론 자식들이 당신의 일로 그 동안 고통에 시달려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자신을 슬슬 피하거나 때로는 색안경을 끼고 보기도 했을 것이다. 왜 보도연맹에 들게 되었느냐고 묻자, 대답은 너무 간단했다. “해방 뒤 군정과 이승만 정권에서 일제의 하수인인 경찰, 교사, 검사, 군인들이 다시 세력을 잡는 모습을 보고 반정부 활동을 벌인 탓” 이라고 했다.

그렇다. 이들은 ‘빨갱이’ 이기 전에 민족주의자였다. 강수의 선생은 강제로 보도연맹에 가입한 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

### 다 료해라, 다 물어봐라

기획·발행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필자 | 이이화, 강정구, 이영일, 김동춘, 이령경, 이창수, 장석규, 강창일 외  
발행일 | 2003년 12월 31일  
후원 | 행정자치부  
편집 책임 | 이춘열  
편집 협력 | 김범현, 신혜영  
편집·디자인 | 우인미디어  
자료 협조 |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고양금정공공대위/광주인권운동센터/나주사랑시민회/  
민간인학살문제해결을위한경남지역모임/민간인학살진상규명충북대책위/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전민특위/지리산외공학살대책위/제주4·3연구소/죽이는이야기/  
참여자치대전시민연대/학술단체협의회/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KBS <인물 현대사>/  
RTV 리포트/김득중/김주완/박유민/신나영/이령경/전갑생/정청/최완옥/최홍섭/황성원 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의 진실을 밝히고자 애쓰시는 모든 유족, 단체, 활동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주소 | 서울 용산구 후암동 445-8 3층(140-190)

전화·전송 | 02-736-5158

홈페이지 | <http://www.genocide.or.kr>

메일 | [genocide@genocide.or.kr](mailto:genocide@genocide.or.kr), [genocide2002@hanmail.net](mailto:genocide2002@hanmail.net)



비 검속을 당했다. 한국전쟁 직전에도 검속되어 장흥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었다. 이들은 군인에게 집단 학살을 당했으나 그는 요행히 살아남았다.

이야기가 좀 장황한 것 같으나 강수의 선생의 경우도 하나의 모델이 될 것이다. 더욱이 낫 놓고 기역 자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부모가 희생을 당했건 자식이 희생을 당했건 그 동안 '빨갱이 가족'으로 지목을 받아 온갖 고통을 겪었다. 그 가족들은 연좌제에 묶여 취직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고, 취직을 해도 온갖 불이익을 당했다. 그 한과 원망이 오뉴월 서리를 녹이고도 남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체는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한다. 그러나 진정한 민주 가치는 그 동안 역대 독재 정권에 의해 유린되어 왔다. 한국전쟁을 전후로 한 무고한 민간인 학살 문제를 거론하는 것조차 좌익 세력으로 몰렸다. 이런 척박한 정치 풍토에서 우리는 60여 년을 보냈다. 하지만 우리의 민주 인사들은 이 땅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 문제를 꾸준히 들고 나왔다. 이 운동이 일어난 것은 몇 년 되지 않는다.

사실, 정치적 혼란기 또는 전쟁 기간에는 무고한 희생자가 무수히 나오기 마련이다. 한국사의 경우에 대표적인 사례로 조일전쟁(임진왜란) 시기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근대 이후 많은 침략 전쟁이 야기되었다. 한때 근대의 법 정신에 따라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키고 보상을 하는 것이 근대 인권 국가의 기준이 되어 오고 있다.

거듭 말하거니와 우리의 역대 정부는 이를 철저히 외면해 왔다. 민주화를 외치고 인권을 표방한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도 모르는 체해 왔다. 자신들의 정치적 계산과 이해를 따진 탓일까? 아니면 현실 정치에 매몰되어 역사의 정의와 인권을 추구

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던 탓일까?

아무튼 해방 이후 우리의 사정은 아주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정치적 혼란기에는 민족 세력과 반민족 세력이 충돌했고, 남북 문제를 두고도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런 뒤 성립된 이승만 정권은 반민족적, 반동적 행태를 보였다. 유신 독재를 단행한 박정희 정권도 이승만 정권과 한 점 다를 바가 없었고, 오히려 탄압의 강도를 더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강수의 선생 같은 희생자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탄생한 것이다.

한국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이 전개되었다. 이 전쟁은 과거의 역사에서 보았던 정복 전쟁과 달랐다. 이런 현실에서 경찰, 군인, 우익 청년, 인민군, 미국 군인들에 의해 어린아이에서 노인, 부인을 가리지 않고 살육이 자행된 것이다. 이를 역사 용어로 흔히 옥석구분(玉石俱焚)이라 한다. 곧 어느 것이 옥이고 어느 것이 돌인지 가리지 않고 모조리 태워버린다는 뜻이다.

한국전쟁 기간, 총으로 죽이기도 하고, 족창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비행기에서 폭탄을 퍼붓기도 하고, 집과 마을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귀찮게 '옥석'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다. 시체마저 집단으로 파묻거나 불태워 버렸다. 이를 그 동안 '양민 학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으나 근래에는 이들을 '민간인 희생자' 또는 '민간인 피학살자'로 부른다.

희생자의 유족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경찰의 감시를 받고 주위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으며, 군대에 가서도 정보 계통에는 배치를 받을 수 없었고, 취직을 해도 견제와 감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또 사관학교나 국가의 주요 기관의 입학 또는 취직은 생각할 수조차 없었다. 서류 심사나 신상 조사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이런 연좌제 시대가 수십 년 동안 이어졌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민족의 비극을 청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그 동안 피해 주민들의 줄기찬 요구에 따라 제주도나 거창 등지의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사건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하나의 진전이었으나 동시에 결함도 내포하고 있다.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제주도나 거창의 민간인 희생자와 같은 사건이 전국 곳곳에 널려 있다는 사실은 모두 아는 일이다. 이들 사건에 대해 어떤 경우는 지방 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위령제를 지내기도 하고, 유족이나 관련 인사의 노력으로 위령비를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가해자들의 방해와 자치단체장의 비협조로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전쟁 전후 전국적으로 자행된 학살 사건의 진상 규명과 무고한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통합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발의와 동의를 얻어 상임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금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그 동안 많은 국회의원들이 통합 특별법 제정에 협조하여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글 쓰는 이는 두 번에 걸쳐 공청회에 참석했는데, 일부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위원으로 이름만 걸어 놓고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의원도 있었다. 또 국방부 당국자는 엉뚱하게 개별 입법을 주장하기도 하는 등 진상 조사를 축소하려는 의도마저 드러났다.

엿그제 국회의장은 기자 회견을 통해 “네 개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가 예산이 40조 원이 든다.”거나 “동학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한국전쟁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베트남전 이라크전 희생자들까지 보상해야 하는 특별법이 제정될 것이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무슨 근거로 국가 예산이 40조 원이 든다는 말인지, 일본 침략에 저항한 동학 농민혁명 희생자는 바로 독립 유공자로 지정된 1차 의병과는 불과 1년 정도의 차이도 나지 않는데 까마득한 옛 일처럼 치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또 한국전쟁 희생자가 베트남전이나 앞으로 있을 이라크전 희생자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말인가? 한 나라의 국회의장의 역사 인식이 상식 이하의 수준임을 보여주는 작태이다.

통합 특별법은 분명히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에 그 입법 목적을 두었지, 금전적인 보상이나 가해자의 처벌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런데도 국회의장이 똥딴지 같은 말을 버젓이 늘어놓았다.

우리는 새로운 분열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첫째는 그 진상을 옳게 파악하고 명예를 회복하여 적어도 선언적 의미로라도 인권 국가의 대열에 들어서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임을 세계에 과시해야 한다. 또 이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통일 시대에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바르지 못한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민족이나 국가는 밝은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



# 다 죽어라, 다 쓸어버려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에 관한 짧은 기록

## 차례

### 책을 펴내며

오늘, 왜 민간인 학살 문제인가?—이이화 5

### 제1장 온 국토가 무덤 13

남한 지역 학살 지도 14

경기도 16

강원도 18

충청남도 20

충청북도 22

전라남도 24

전라북도 26

경상남도(북부 지역) 28

경상남도(남부 지역) 30

경상북도(북부 지역) 32

경상북도(남부 지역) 34

제주도 36

### 제2장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개관—강정구 37

1. 머리말 38

2. 민간인 학살의 의미 39

3. 양민 학살이 아닌 민간인 학살 40

4. 민간인 학살의 기원 41

5. 민간인 학살의 유형과 특성 46

### 제3장 대다수 국민이 잠재적인 적 63

1. 6·25 이전의 학살—이영일 64

2.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 학살—범국민위 사무처 77

3. 형무소 재소자 학살 88

4. 미군에 의한 학살 94

5. 한국군에 의한 작전중의 학살—김동춘 104

6. 군, 경, 우익 단체에 의한 부역 혐의자 학살 109

7. 인민군 및 좌익에 의한 학살 113

8. 북한 지역의 학살 115

9. 종합 정리 117

### 제4장 죽은 사람, 남은 사람—이령경 123

1. 죽은 사람 124

2. 남은 사람—처절한 가난 128

3. 남은 사람—강요당한 침묵과 단절 132

4. 남은 사람—조국을 버려야 했던 사람들 137

5. 죽은 사람, 남은 사람 140



제5장 어떻게 해결돼야 하나?—이창수	143
1. 민간인 학살의 개념과 그 범죄성	144
2. 해결의 제 차원	149
3. 남는 문제들—정치 사회적 측면	157
4. 종합과 전망	160
<b>보론</b>	161
역사 교과서와 역사 교육—장석규	
제6장 후손에게 물려줄 인권과 평화의 나라—강창일	175
1. 남북을 잇고도 남는 주검	176
2. 부끄러운 과거사 정리를 위해	177
3. 진실의 바닥을 다지고 화해의 꽃을	179
4. 후손에게 물려줄 값진 선물	180
<b>부록</b>	183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운동 일지	
2.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국민 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내역	
3. 민간인 학살 관련 사회단체와 유족회 일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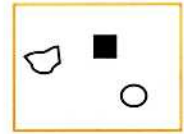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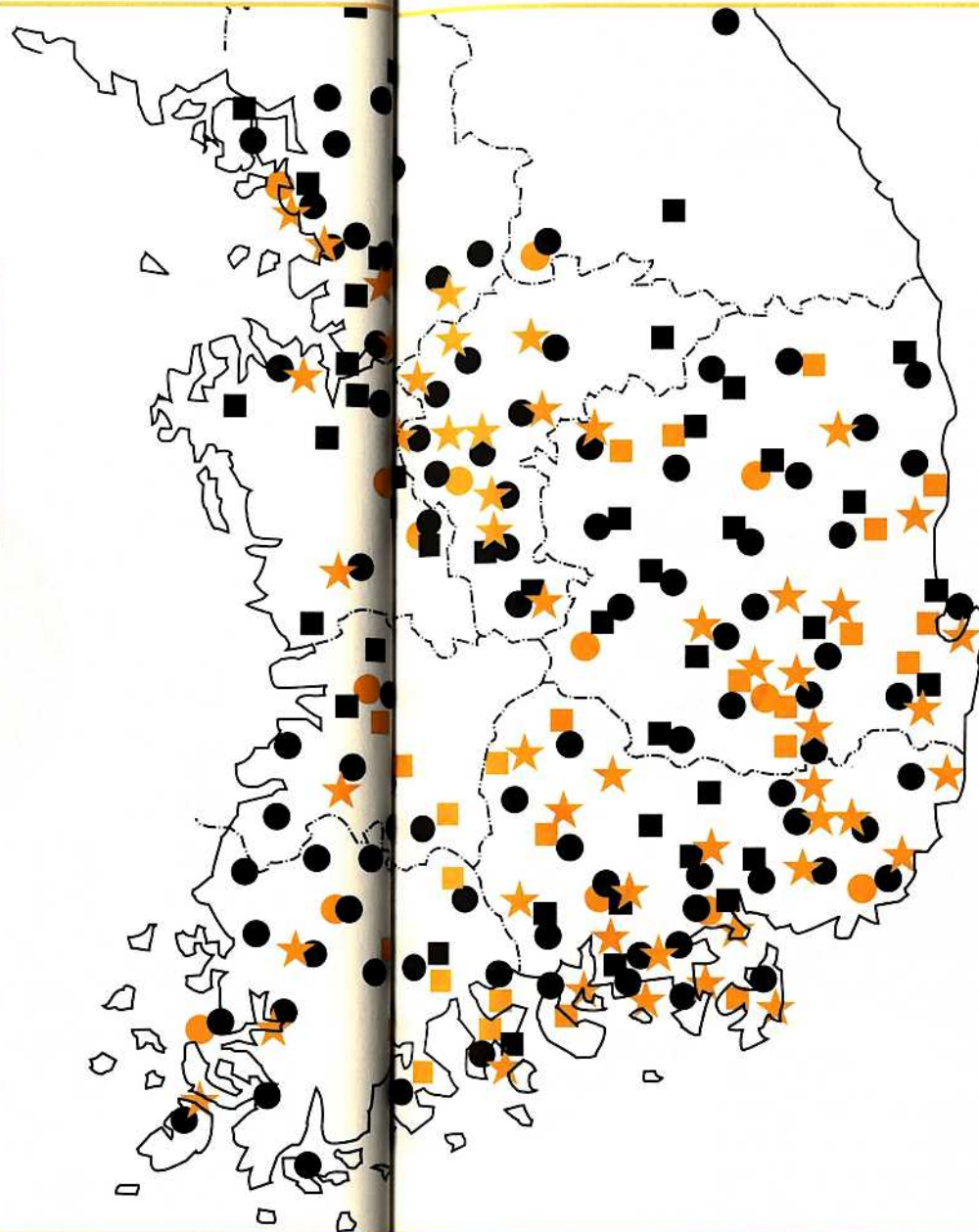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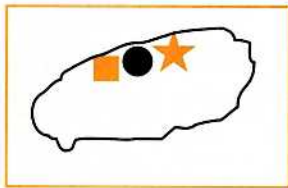
## 제1장 온 국토가 무덤



## 남한 지역 학살 지도

\* 이하 지도에 표시된 지역은 집단 학살 문제가 공식 제기된 주요 학살 지만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 미군에 의한 학살지
- 군경, 우익단체에 의한 학살지
- ★ 보도연맹 학살지
- 6·25전 학살지
- 형무소 학살지





# 경기도

## 강화

- 1950년 10월 이후 경찰과 강화 향토방위 특공대(우익 청년단)에 의해서 부역 혐의자 및 좌익 관련자 수십~수백 명 학살  
 - 1951년 1월 1-4 후퇴 직후, 강화 향토방위 특공대가 부역 혐의자 및 그 가족을 옥계 갯벌에서 약 300명, 갑곶 나루터에서 60여 명 학살

## 고양

1950년 9-28 수복 후, 경찰, 우익 치안대, 태극단 등이 부역 혐의자 및 그 가족을 학살. 일산 탄현동 금정굴에서 400~1,000명, 송포면 구산리 강변에서 100여 명, 송포면 대화리, 가좌리 강변에서 400여 명, 원당 도내리에서 수십 명, 벽제 성석리에서 6가족 학살 등 고양시에서만 수천 명 학살(1995년 유골 발굴)

## 인천

1950년 6월 29일부터 3일간 인천 시내, 서해, 산간, 월미도, 송도 등지에서 국군 패잔병, 경찰, 청년 방위단, 미 군사 고문단의 명령으로 인천 형무소 수형인과 보도연맹원 700~1,000명 학살  
 인천 상륙 다음 날 인천 등지에서 미군이 약 1,300명 학살

## 안산

1950년 보도연맹원 400~500명 학살

## 군포

1950년 9-28 수복 후 우익 치안대가 부역 혐의자 400여 명 학살

## 파주

1950년 9-28 수복 직후 경찰과 우익 치안대가 부역 혐의자 및 그 가족을 학살, 산남리에서 72명, 교하면 문발리 강변, 오도리 골짜기에서 200~300명, 교하면사무소 뒷산에서 200여 명, 금촌 우물에서 40여 명 학살

## 양주

1950년 9-28 수복 후 우익 치안대가 부역 혐의자 수백 명 학살

## 남양주

- 1950년 9-28 수복 후 진전면, 별내면에서 우익 치안대가 부역 혐의자 40~50명 학살  
 - 1951년 2월 10일 내곡리에서 미군 폭격으로 사망 5명, 부상 2명  
 - 1951년 2월 20일 일패동에서 미군 폭격으로 사망 6명, 초가집 전소

## 여주

1950년 9-28 수복 후 금사면 이포리, 여주 강변에서 국군, 우익 치안대가 부역 혐의자 다수 학살

## 이천

1950년 보도연맹원 400~500명 학살

## 용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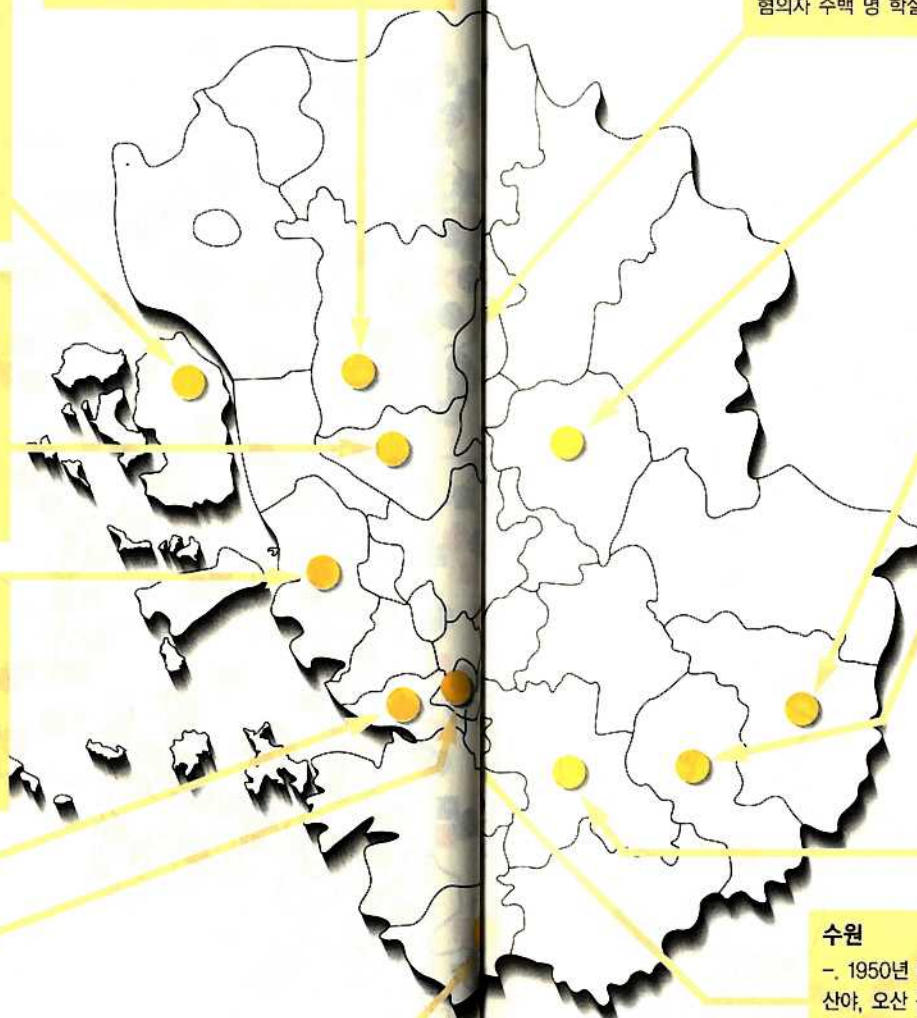
- 1951년 1월 12일 수지면 풍덕천리에서 피난민에게 미군 F-80이 폭격하여 20~30명 사망  
 - 1951년 1월 15일 죽전리에서 미군 폭격으로 17명 사망, 3명 부상

## 수원

- 1950년 6월 30일~7월 4일 수원 형무소, 수원 시내, 산야, 오산 등지에서 국군, 헌병이 미군의 직접 지시로 수원 형무소 수형인과 보도연맹원 등 약 1,000명 학살  
 - 1950년 7월경, 수원 뒷고지에서 미군의 기총 사격으로 국군 80~100명 사망

## 평택

1950년 보도연맹원 400~500명 학살



# 강원도

## 고성

1951년 1·4 후퇴 당시 미군 폭격으로 12명 사망, 부상 1명

## 속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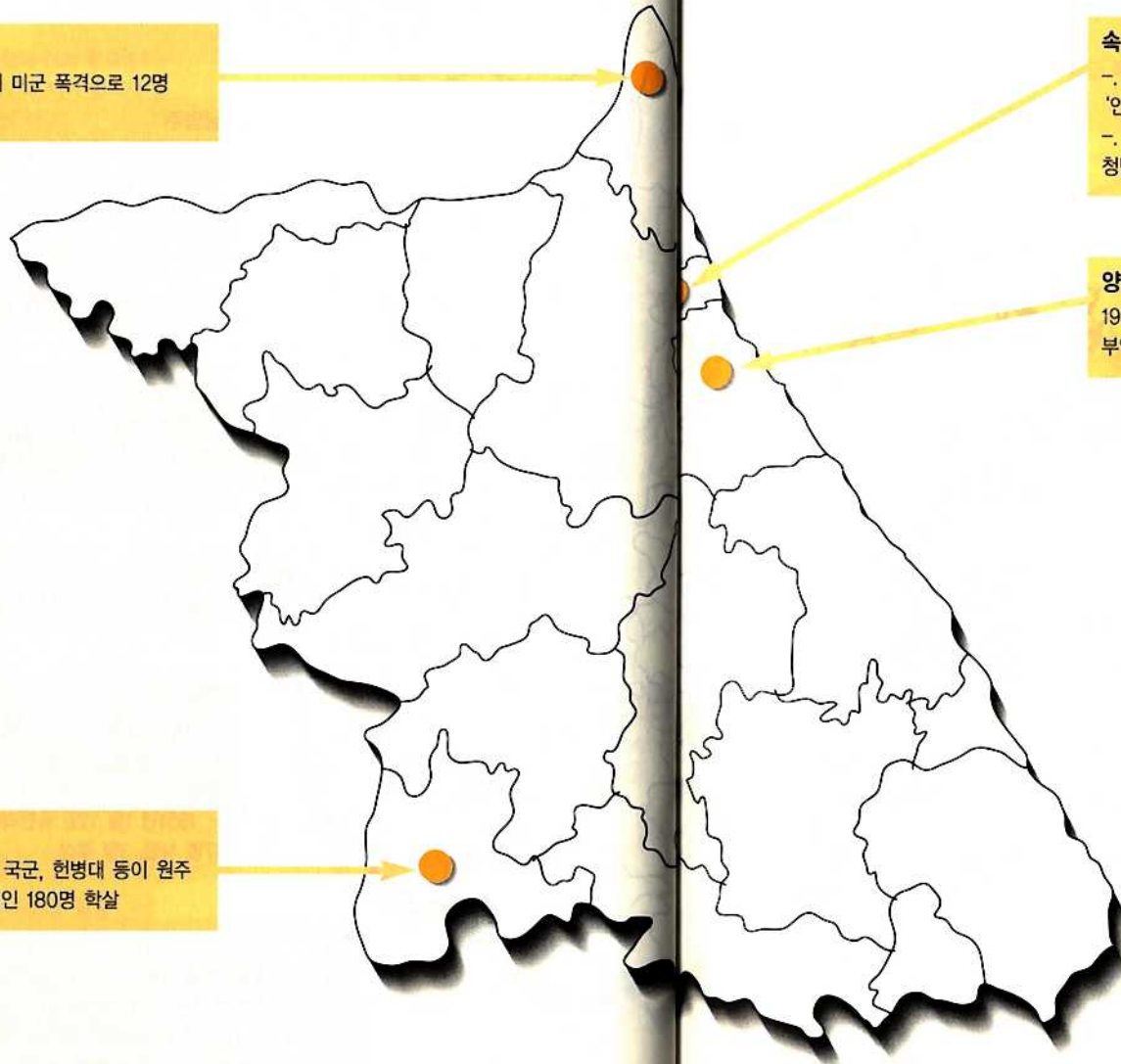
- 1950년 12월, 국군이 인민군으로 가장하여 '인민군 열성대회'를 열고 모인 군중을 학살
- 1951년 부월리, 온정리, 논산리에서 대한 청년단(우익 치안대)이 부역 혐의자 학살

## 양양

1951년 조산리에서 대한 청년단(우익 치안대)이 부역 혐의자 학살

## 원주

1950년 6월 30일경, 국군, 헌병대 등이 원주 형무소 뒷산에서 수형인 180명 학살





# 충청남도

## 당진

- 1950년 7~8월경 서산 경찰서에서 보도연맹원 100여 명을 소집한 뒤 매죽굴로 끌고 가 학살  
 - 1950년 7~8월경 태안 경찰서에서 보도연맹원을 소집한 뒤 인근 들판에서 학살

## 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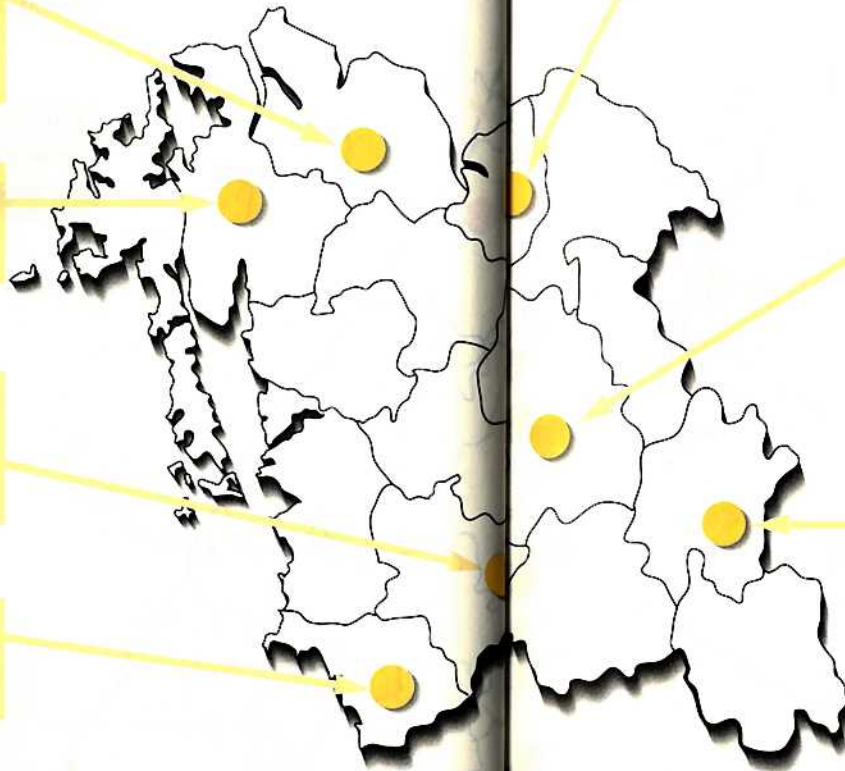
한국전쟁 당시 서산 대산리에서 미군 폭격으로 다수 희생

## 부여

1950년 6월 23일경, 충남 공상협의회 회원 54명(만기 출소한 사람들)을 경찰이 예비 검속해 백마강에서 학살

## 서천

1950년 8월 20일 대산리에서 미군 폭격으로 수십 명 사망



## 아산

- 1951년 1·4 후퇴 이후 배방면 복수리에서 부역 혐의자 수백 명 학살  
 - 1951년 1월 15일경 둔포에서 미군 폭격으로 300여 명 학살

## 공주

1950년 7월 7일경 군경이 공주 형무소 수형인을 왕촌 말머리재에서 700~800명 학살

## 대전

- 1950년 7월 8~10일, 혹은 이후 열흘 사이에 대전 형무소 수형인을 산내 골령굴에서 학살, 미군 문서에 1,800여 명으로 기록,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3,000여 명, 당시 외신에서는 7,000~8,000명 학살로 보도  
 - 1950년 7월 말 유성구 계산에서 미군 폭격으로 마을 주민과 피난민 50여 명 사망

# 충청북도

**음성**  
1950년 7~8월경 대소면에서 보도연맹원을 광혜원 조리방죽으로 끌고 가 20여 명 학살

**진천**  
1950년 7~8월경 진천읍 사성리에서 보도연맹원 100여 명을 오창 경찰서로 끌고 가 학살

**청원**  
- 1950년 7월 9일, 혹은 7월 11일 국군이 옥녀봉에서 사리면, 칠성면, 불정면 등지에서 끌고 온 보도연맹원 800여 명 학살  
- 1950년 7월경 경찰이 남일면 두산리 분터골에서 청주 지역 보도연맹원 100여 명 학살  
- 1950년 7월 8일 북위면 북이 지서, 7월 11일 남일면 쌍수리, 신기리 등에서 경찰이 보도연맹원 학살  
- 1950년 7월 초 경찰이 미원면 미원리 담배 창고에서 좌익 가족 예비 검속 후 고문, 학살  
- 1950년 7~8월 오창면 창고에서 보도연맹원 학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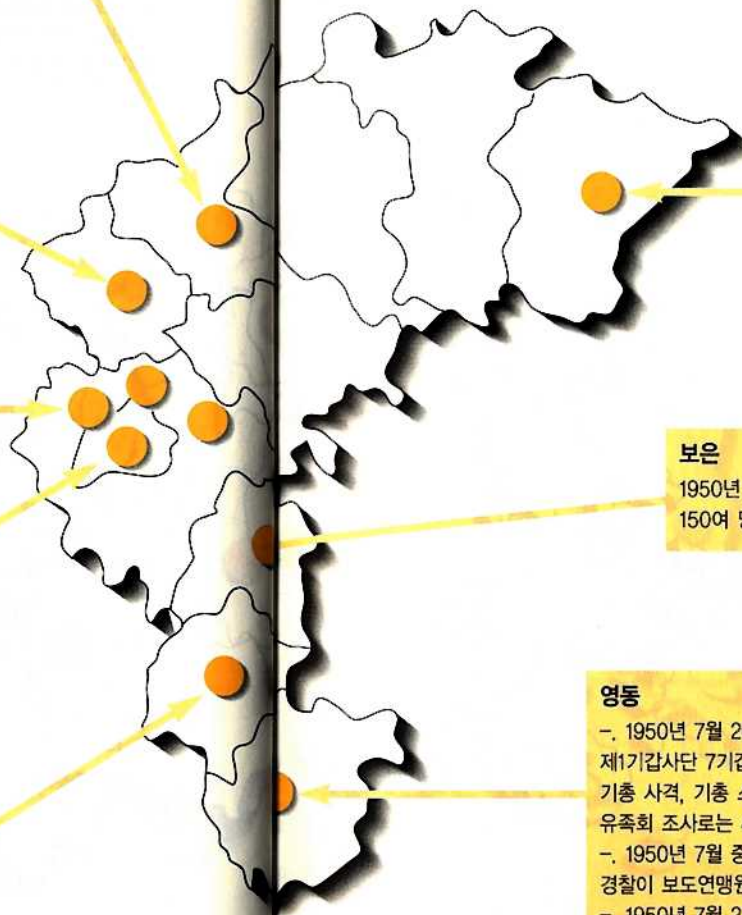
**청주**  
1950년 7~8월경 청주 교도소 가덕 공원묘지에서 수형인 200여 명 학살

**옥천**  
- 1950년 7월 13일, 경찰이 월전면에서 보도연맹원 500여 명 암매장, 일부 수장, 7월 14일 경찰이 옥천군 동이면에서 보도연맹원 학살, 옥천읍 금구리 보도연맹원 200여 명 학살  
- 1950년 인민군이 청산면에서 물러난 후 청산면에서 미군 폭격으로 다수 희생

**단양**  
- 1951년 1월 20일 미군의 영춘면 곡계굴(괴개굴) 폭격으로 360명 학살  
- 1951년 1월 14~15일 노동리에 미군 탱크, 항공기, 지상군 공격으로 74명 사망, 20명 부상

**보은**  
1950년 7월 경찰이 아곡리에서 보도연맹원 150여 명 학살

**영동**  
- 1950년 7월 26일~29일 노근리에서 미군 제1기갑사단 7기갑 연대 제2대대가 공중 폭격, 기총 사격, 기총 소사로 248명(한미 합동조사, 유족회 조사로는 400여 명) 학살  
- 1950년 7월 중순 영동을 설계리 아산에서 경찰이 보도연맹원 300~400명 학살  
- 1950년 7월 23일 묘동리에서 미군 병사가 3명 사살  
- 1950년 7월 지촌리에서 미군이 다수 사살





# 전라남도

**광주**  
1950년 7월 7일~23일 광주 형무소 수형인을 광산군 일대에서 국군, 헌병이 미군의 직접 지시로 학살

**함평**  
1950년 12월 6일~1951년 1월 12일 사이에 공비 토벌을 목적으로 작전을 벌이던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가 월야, 해보, 나산면 마을 주민 524명을 학살하고 민가 1,454채 전소

**나주**  
- 1951년 1월 20일 세지면 오봉리 동창교에서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가 130명 학살  
- 1951년 2월 26일 나주 봉황면 철천리 동박골재에서 경찰, 경찰 특공대가 38명 학살  
- 1950년 7월 20일~23일 나주 왕곡면 온수골에서 경찰이 보도연맹원 300여 명 학살  
- 1951년 경찰이 문평면 국동리에서 끌고 온 민간인 42명 등 학살

**목포**  
1950년 7월경 목포 형무소 수형인을 군경이 학살

**진도**  
1950년 7월 하순경 진도 갈명도(갈매기섬)에서 경찰이 해남 보도연맹원 260명 학살

**해남**  
- 1951년경 마산면 산막리에서 경찰이 30여 명 학살  
- 1950년 7월 26일경 마산면 일대에서 인민군으로 위장한 경찰(일명 나주 부대)이 20여 명 학살

**장성**  
1951년 1월 25일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가 황룡면 통안리 및 아곡리에서 공비 소탕 명분으로 100명 이상 학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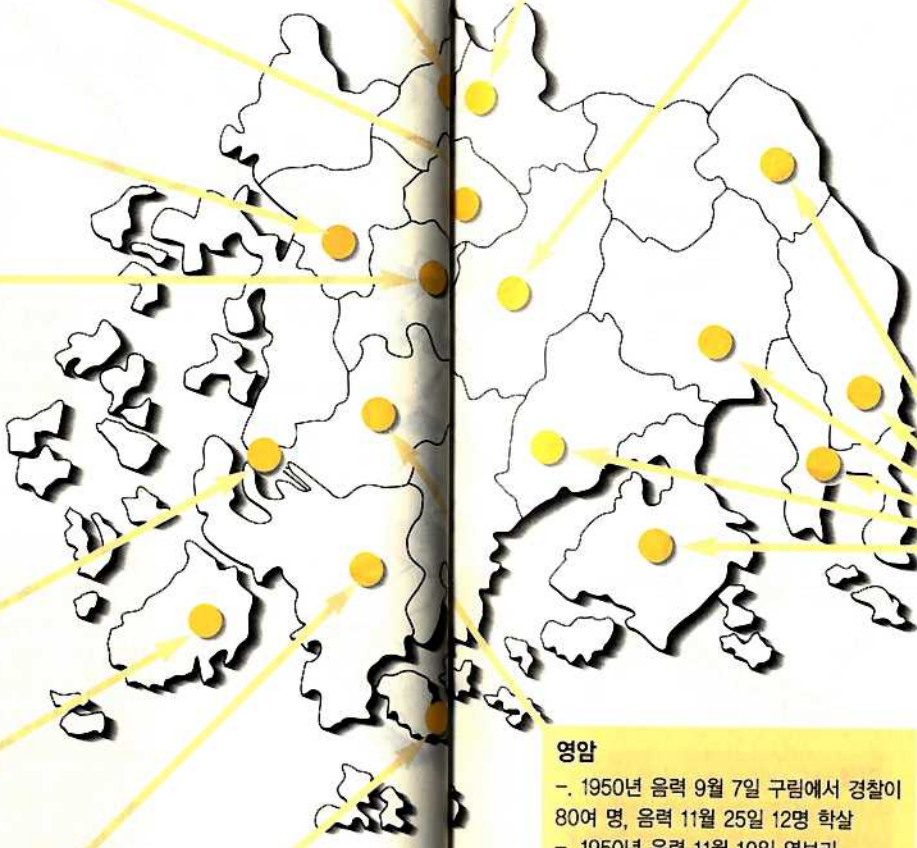
**담양**  
1950년 11월 11일 운산리에서 국군 11사단 예하 병력이 공비 소탕 명분으로 민간인 55명 학살

**화순**  
- 1949년 음력 3월 19일 이양면 용반리에서 국군 11사단 20연대가 빨치산 소탕 명분으로 6명 학살  
- 1949년 9월 23일과 한국전쟁 기간 중 중앙면 산간리 등 7개 마을에서 군경이 17명 이상 학살  
- 1949년 10월경 북면 군경이 50여 명 학살  
- 1950년 9월 말 화순읍 교리 저수지에서 군경이 32명 학살  
- 1950년 10월 12일 동면에서 군경이 20여 명 학살  
- 1950년 11월 17일 남면 다산마을 마을회관, 논에서 국군 제11사단 20연대 1중대(일명 장소위 부대)가 23명 학살  
- 1950년 10월~1951년 4월 북면에서 군경이 1,000여 명 학살  
- 1951년 3월 17일 도암면 도장리 마을 앞 논에서 국군 제11사단 20연대 1중대가 20명 학살  
- 1951년 7월 20일경 북면에서 군경이 480여 명 학살  
- 1951년 10월경 중앙면에서 군경이 21명 학살  
- 1951년 12월 5일~10일 도암면에서 군경이 281명 학살  
- 1953년 3월 14일 이양면 두봉산, 형제봉 계곡에서 군경이 36명 학살  
- 1953년 4월 6일 북면 백아산 일대에서 군경이 46명 학살  
- 1953년 4월 15일 청동 깃대봉에서 군경이 37명 학살

**여수, 순천, 구례 등 전남 동부**  
- 여순사건으로 여수 약 5,000명, 순천 2,200명, 보성 400명, 고흥 200명, 광양 1,300명, 구례 800명, 곡성 100명의 민간인 학살(반군에 의해 5%, 진압 군경에 의해 95%)  
- 1950년 7월 25일 순천 풍덕동에서 미군 폭격으로 4명 사망  
- 1950년 8월 3일 여수 남면 안도리 이아포에서 미군의 기총 소사로 150명 학살  
- 1950년 8월 7일 여수 남면 두룩아에서 미군의 기총 소사로 12명 학살  
- 한국전쟁 직후 울촌, 소라, 삼일, 쌍봉과 여수 내륙 지방의 보도연맹원 120명을 여수 경찰서에 집결시킨 후 경남 남해 남단의 애기섬으로 끌고 가 총살하고 수장, 화양면과 화정면의 보도연맹원들은 가막섬 부근에서 수장

**영암**  
- 1950년 음력 9월 7일 구림에서 경찰이 80여 명, 음력 11월 25일 12명 학살  
- 1950년 음력 11월 10일 연보리 차네골에서 군인이 161명 학살  
- 1950년 음력 5월 30일 금정 담재에서 경찰이 200~250명 학살

**완도**  
1950년 7월 말경 완도 일대에서 인민군으로 위장한 경찰(일명 나주 부대)이 수천 명 학살





# 전라북도

## 군산

1950년 10월 12일 옥구군 회현면 금강리, 원우리에서 민간 치안대에 의해 60~70명 보복 학살

## 김제

한국전쟁 당시 김제역 부근 폭격으로 다수 희생

## 고창

- 1950년 12월 22일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6중대가 심원면 고전리 당산나무 앞에서 약 30명, 심원면 개명산 일대 바닷가에서 약 50명 등 심원면 일대에서 약 200명, 같은 날 해리면 동호리 구동호에서 100명 학살
- 1951년 1월 5일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6중대가 공음면 선동리 선산부락 성인봉, 옥산 저수지에서 공음, 대산, 무장면에서 온 피난민 590명 학살
- 1951년 1월 6일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6중대가 상하면 하장리 오락부락 상하국교 옆 공터에서 16명 학살
- 1951년 3월 3일 국군 11사단 20연대 3대대 8중대가 상하면 하장면 자룡리 고리포 해변에서 비둘기굴에 숨어 있던 피난민 60명 학살, 동 부대 3월 13일 상하면 웅대리 태동부락에서 부녀자, 노약자 및 타지 피난민 50~100명 학살
- 1951년 5월 10일 무장면 율림리 죽림부락에서 김용식과 제18전투경찰대가 영전 김씨 50명 살해에 대한 보복으로 100명의 영양 천씨 일가 학살

## 익산

1950년 7월 12일 익산역(당시 이리역)에서 미군 전폭기 B29 두 대의 폭격으로 350여 명 사망

## 정읍

- 1950년 7월 6일 소성면 보하리 와석부락에서 군경이 보도연맹원 학살
- 1951년 2월 20일 국군 11사단 13연대 1대대 병력이 산내면 중성리에서 45명~60명 학살 및 가옥 전소
- 한국전쟁기간 중 군경에 의해 영원면에서 1명, 소성면에서 8명, 칠보면에서 1명 학살

## 전주

1950년 7월 4일 전주 형무소 수감자 1,300명~1,400명을 국군 헌병대, 방첩대원, 경찰이 미군 장교 입회하에 학살

## 순창

- 한국전쟁 기간 중 군경에 의하여 공비소탕 명분으로 순창읍에서 34명, 북흥면에서 166명, 동계면에서 97명, 쌍치면에서 536명, 풍산면에서 15명, 팔덕면에서 12명, 금과면에서 33명, 적성면에서 7명, 유등면에서 6명, 인계면에서 36명 학살
- 구림면 회문산 일대에서 국군 11사단 20연대가 86명 학살

## 임실

- 1948년 여순사건 직후 임실읍에서 경찰이 빨치산 부역 혐의로 십수 명 학살
- 1950년 강진면 광산굴 폐광에서 국군 11사단 13연대 2대대 군인들이 공비 소탕 명분으로 무차별 사격해 200~370명 총살
- 1950년 12월 14일경 덕치면 암치 당산나무 밑에서 국군 11사단 13연대 군인들이 40여 명 학살, 덕치면 구담리 면사무소 앞에서 동 군인이 50여 명 학살
- 1951년 3월 2일~6일 옥정면 배소고지에서 국군 11사단 군인들이 무차별 사격으로 200여 명 학살
- 1951년 3월 15일 청응면 남산리 폐광에서 국군 11사단 13연대 군인들의 무차별 사격으로 370명 질식사

## 남원

- 한국전쟁 중 주천면에서 150여 명, 산내면 약 50명 학살
- 1949년 7월 20일 산내면 내삼동 덕동국교 뒷산에서 국군 3연대 소속 2개 중대가 13명 학살
- 1949년 12월 7일 주천면 고기리에서 국군 11사단 12연대 예하부대가 26명 학살
- 1950년 11월 17일 대강면에서 국군 11사단 1개 대대 병력이 약 90명 학살
- 1950년 11월 20일 주천면 고기리 내기, 고촌, 회덕, 노치, 운봉면 주촌에서 국군 11사단 예하부대 및 경찰부대가 30여 명 학살, 가옥 300여 채 전소
- 1950년 12월 29일 주천면 덕치리에서 국군 11사단 수색중대와 남원 경찰이 약 30명 학살, 가옥 전소



## 경상남도(북부 지역)

### 거창

- 1948년 5월 8일 거창 경찰서 경찰들이 빨치산 습격에 대비하지 않았다고 위천면장 조병욱 등 20여 명 고문, 학살
- 1949년 음력 7월 21일~27일 함양군 안의 지사에서 경찰이 통비분자 혐의로 남상면 춘전리 마을 주민 24명 학살
- 1951년 2월 9일~11일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가 통비분자 혐의로 신원면 덕산리 청연골에서 84명, 신원면 대현리 탄랑골 100명, 신원면 과정리 박산골 511명, 신원면 기타 지역에서 18명 학살(일명 거창 사건)

### 함양

- 1949년 음력 윤 7월 28일 수동면 이رن리 당그래산에서 국군이 마을 주민 32명을 통비분자로 몰아 학살
- 1950년 음력 5월 21일 지곡면 대평리에서 보도연맹원 학살
- 1951년 2월 8일 휴천면 동강리 점촌, 유림면 서주리에서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가 통비분자 혐의로 주민 94명 학살(일명 산청-함양 사건)

### 산청

- 1949년 6월 19일~1950년 2월 21일까지 사천면, 삼장면, 단성 일대에서 빨치산 토벌을 목적으로 주둔하던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가 마을 주민을 통비분자로 몰아 1,000여 명 학살
- 1949년 음력 12월 16일 금서면 지막마을에서 오부면 오전리 대현마을 청년 7명이 빨치산 부역 혐의로 학살
- 1950년 음력 1월 6일 오부면 오전리 대현마을에서 노인과 어린아이 15명 학살
- 1951년 2월 8일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가 통비분자 부역 혐의자 292명(일명 산청-함양 사건) 학살
- 1951년 2월 하순 지리산 외공리에서 군경이 버스에 끌고 온 민간인 400~700명 학살

### 합천

- 1950년 음력 6월 6일 묘산면 마령재에서 경찰이 거창 보도연맹원 20여 명 학살
- 1950년 음력 6월 11일 묘산면 권빈재에서 경찰이 거창 보도연맹원 35명 학살

### 창녕

- 1950년 8월 초 창녕읍 어초리 초막마을, 미군 폭격으로 60여 명 사망, 20여 명 부상
- 한국전쟁 중 남지읍 어만리, 미군 폭격으로 다수 희생

### 밀양

- 밀양 보도연맹원 300여 명 학살
- 삼랑진 보도연맹원 200여 명 학살

### 울산

- 1950년 8월~9월 울주군 온양읍 대원산, 상북면 지내리, 웅촌면 오복리 오복재 등지에서 특무대, 경찰이 보도연맹 869명 학살(유골 발굴)

### 양산

- 1950년 8월~9월 석산리 사배부락 인근 골짜기에서 원리, 곡리, 지당 3개 마을 46가구의 보도연맹원을 특무대, 경찰이 학살(유골 712기 발굴)

### 함안

- 1950년 7월 하순 여항면 여항리 함안 광산에서 보도연맹원 200여 명 학살
- 1950년 8월 20일 법수면 토현리에 미군 폭격으로 다수 부상
- 1950년 8월 20일 군북면 장지리에 미군 폭격으로 170여 명 사망, 100여 명 부상
- 1950년 8월 27일 군북면 수곡리, 박곡리 미군 폭격으로 일가 3명, 피난민 2명 사망, 다수 부상
- 1950년 8월 군북면 원북 터널에 미군 폭격으로 100여 명 사망, 다수 부상
- 한국전쟁 중 군북면 유현리에서 미군 폭격으로 100여 명 사망
- 한국전쟁 중 가야읍 협곡리에서 미군 폭격으로 4명 사망, 가옥 290여 채 전소

### 의령

- 1950년 8월 22일 웅덕면 정동리에서 미군 전투기 4대 폭격, 기총 사격으로 33명 사망, 30명 부상, 가옥 100여 채 전소
- 1950년 8월 11일, 13일, 15일, 17일 화정면 상일리 보천마을, 미군 전투기 4대 폭격으로 22명 사망, 6명 부상
- 1950년 음력 7월 7일 의령읍 만천리, 미군 폭격기 4대 폭격으로 1명 사망, 10여 명 부상



# 경상남도(남부 지역)

## 진주

- 1950년 7월 15일~29일 미군, 특무대, 대한청년단 등이 진주 형무소 수감자를 학살하고, 정촌면, 문산면, 성면, 명석면 보도연맹원 718명을 명석면에서 학살하는 등 약 2,000명 학살
- 1950년 7월~8월 진주 정자리, 수곡면 원당리, 명석면 오미리 시목마을, 반성면 쇠골, 미군 폭격으로 주민 사망
- 1950년 8월 3일 주약동 약골, 진치령 터널에서 미군 폭격, 기총 사격으로 40~50명 사망, 수십 명 부상

## 하동

- 매티재에서 보도연맹원 150명 학살
- 1950년 음력 6월 17일 양보면 장암리 양정골에서 미군 기관총 사격으로 7명 사망

## 사천

- 1950년 7월 31일 곤명면 마곡리, 미군의 F54 폭격과 기총 사격으로 13명 사망, 8명 부상
- 1950년 8월 2일 곤명면 조장리, 미군의 폭격과 기총 소사로 150명 사상
- 1950년 7월 하순~8월 초순 삼천포 서금동 노산공원에서 국군이 보도연맹원 300~400명 학살

## 남해

- 1950년 6월 25일경 상주리에서 국군이 주민 70여 명 학살
- 1950년 7월 중순 운천면 월곡 문항 창선마을 앞, 비뜨섬, 진섬 앞 등에서 경찰이 29명 수장
- 1950년 7월 중순 남해 이동면 신전리 북곡골짜기에서 경찰이 보도연맹원 33명 총살

## 고성

- 1950년 7월~8월 개천면 북평리 원동마을, 하이면 등에서 군대와 CIC, G-2, 해상방위대, 경찰 등이 150여 명 학살

## 통영

- 1950년 8월 14~15일, 17~22일 한산도 구이포 앞바다, 산양면 영월리 앞바다, 향남동 동충 일대, 명정동 총혈사 뒤편, 안산 광도면 안정리, 현병대, 군 정보기관, CIC, HID, G-2 등이 800명 학살

## 마산

- 1950년 7월 25일 이후 마산 형무소 수형인을 시민극장, 구산면 원전 앞바다 등지에서 현병대, 계엄사령부, 특무대, 경찰 등이 학살, 마산 보도연맹원 1,681명 학살, 수장
- 1950년 8월 초 신포구 신장면

- 부광마을, 미군 폭격으로 83명 사망
- 1950년 8월 7일 진전면 진목리, 미군 전투기 폭격으로 5명 사망
- 1950년 8월 9일 진북면 이목리, 미 제5해병 전투연대 폭격으로 13명 사망
- 1950년 8월 10일 진전면 곡안리, 미군 폭격으로 83명 사망

## 김해

- 1950년 8월~9월 주동 광산과 숲골에서 특무대, 경찰이 보도연맹원 300~400명 학살
- 1950년 6월~9월 진영군 냉정고개 등지에서 특무대, G2, 경찰이 보도연맹원 335명 학살(유골 251기 발굴)

## 부산

- 1950년 8월~9월 부산 형무소 수감자 및 보도연맹원 1,000명(최대 4,000명)을 특무대, 현병 등이 학살
- 1950년 8월~9월 특무대, 현병 등이 사하구 구평동 동매산에서 보도연맹원 160여 명, 영도구 동삼동 미니 공원에서 보도연맹원 200~300명, 동래구 화동 수원지 등지에서 보도연맹원 713명 학살(유골 발굴)
- 1950년 8월~9월 북구 구포동(김해 생림면)에서 국군, 경찰 등이 보도연맹원 53명 학살
- 1950년 8월~9월 중구 부산 터널 위 야산, 서구 암남동 협창소 앞바다, 남구 광안리, 오륙도에서 국군, 현병 등이 보도연맹원 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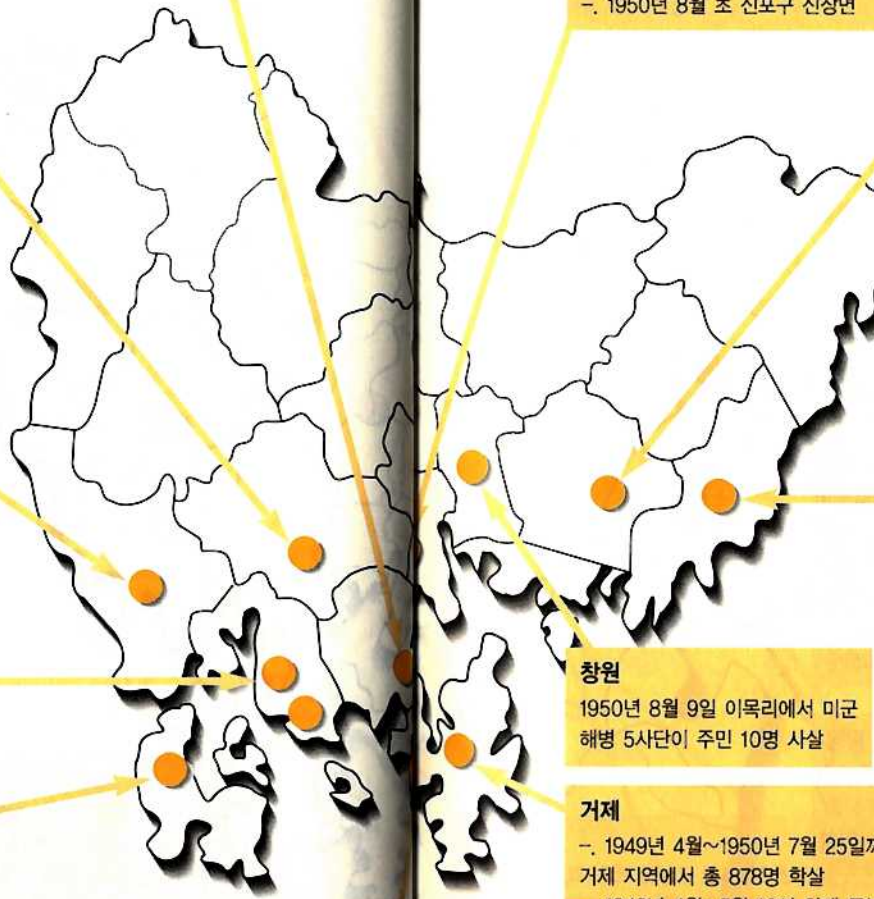
## 창원

- 1950년 8월 9일 이목리에서 미군 해병 5사단이 주민 10명 사살

## 거제

- 1949년 4월~1950년 7월 25일까지 거제 지역에서 총 878명 학살
- 1949년 4월~5월 10여 차례 동부면 구천계곡에서 백골·호림·백호·비호 부대, 민보단, CIC, HID, G-2 등이 통비분자 혐의로 310명 학살
- 1949년 4월, 1950년 7월~8월 하청, 연초 지역에서 백골·호림·백호·비호 부대, 민보단, CIC, HID, G-2 등이 보도연맹원 40여 명 학살

- 1949년 7월 연초면 송정리 뒷산에서 백골·호림·백호·비호 부대, 민보단, CIC, HID, G-2 등이 20~30명 학살
- 1950년 4월 백골·호림·백호·비호 부대, 민보단, CIC, HID, G-2 등이 일운면 구조리 13명, 둔덕면 방답 10명, 장승포 신사 20여 명 학살
- 1950년 7월 25일 지심도에 400여 명 수장
- 1950년 7월 장곡면 15명, 칠천도 부근 40명 수장





# 경상북도(북부 지역)

## 예천

- 6.25 직전 용궁면 산택리 원당고개에서 좌익 혐의로 주민 10명 학살
- 1950년 7월 1일 가동에서 미군 폭격으로 일가 3명 사망, 1명 부상
- 1951년 1월 19일 보문면 산성리, 미군기 4대 폭격으로 50명 사망, 90명 부상
- 1951년 1월 19일 감천면 진평리, 미군 정찰기 폭격으로 30명 사망, 15명 부상

## 문경

- 1949년 음력 8월 2일 문경을 갈평리에서 국군이 통비분자 혐의로 17명 학살
- 1949년 12월 24일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에서 국군이 통비분자 혐의로 마을 주민 86명 학살, 마을 전소
- 1950년 7월 경찰이 모전동 유곡 골짜기 보도연맹원 다수 학살, 영순 지역에서 보도연맹원 다수 학살

## 안동

- 한국전쟁 직전 정산동에서 부역 혐의로 주민 학살
- 한국전쟁 직후 북후면 석탑동 청골에서 경찰이 주민 7명 총살
- 1950년 여름 풍산읍 하리제방에서 미군기 2대 폭격으로 20여 명 사망

## 상주

- 전쟁 직후 옥산에서 국군이 부역 혐의로 주민 학살
- 1950년 모동면에서 국군이 좌익 혐의로 주민 5명 학살
- 1950년 음력 8월 14일 모서면 소정2리에 미군 폭격

## 영주

- 1950년 6월 말 부석지서와 부석중학교 마당 등지에서 경찰이 민간인 학살
- 1951년 1월 19일 봉현면 노좌리에 미군기 수십 대가 폭격, 10명 사망, 10명 부상

## 봉화

- 1949년 국군이 봉화군 물야면, 춘양면 소로리 궁이골, 재산면 남면2리 모천 신달골에서 통비분자 혹은 좌익 혐의로 마을 주민 다수 학살
- 1950년 9월 물야면 경찰이 통비분자 혐의로 마을 주민 학살

## 울진

- 1950년 8월 울진읍 연지리, 해군 함포사격으로 3명 사망
- 1950년 음력 6월 2일 근남면 산포리, 군함 함포 사격으로 4명 사망
- 1950년 7월 2일 근남면 산포리, 미군 폭격으로 3명 사망, 5명 부상
- 1950년 원남면 금매리 몽천(오시골)에서 국군이 마을 주민 학살
- 1950년 음력 8월 15일 근남면 노옹3리에서 국군이 마을 주민 학살

## 독도

- 1947년 4월경 미군 독도 폭격
- 1948년 6월 8일 미군 독도 폭격 약 150명 사망
- 1952년 9월 15일 미군 독도 폭격
- 1952년 9월 22일 독도 폭격

## 영양

- 1949년 10월 30일 석보면 담곡2리, 국군이 좌익 가족 학살
- 1950년 음력 8월 16일 영양읍 대천1리, 국군이 좌익 혐의로 마을 주민 18명 학살
- 1950년 또는 1951년 12월경 수비면 수비초등학교 뒤, 군경이 부역 혐의로 주민 37명 학살

## 영덕

- 1950년 1월 1일 지품면 원전리 각별계곡에서 국군 1개 중대가 좌익 혐의로 송천리 주민 15명 학살
- 1950년 7월 중순 영덕읍 화개2리 외골에서 국군 맹호부대가 보도연맹원 160여 명 학살

## 청송

- 1949년 부남면 이현동에서 좌익 혐의로 10여 명 처형
- 1950년 8월 21일 안덕면 북동에서 미군기 3~4대 폭격, 기관총 난사로 10명 사망
- 1950년 음력 6월 27일 현동면 거성리, 미군 폭격으로 일가 5명 사망
- 한국전쟁 당시 안덕면, 미군 폭격으로 3명 사망, 2명 부상
- 1950년 8월 18일 갈천리, 국군이 10여 명 처형
- 한국전쟁 당시 현동면, 안덕면 금곡리에서 국군이 부역 혐의로 주민 학살

## 의성

- 1951년 2월 4일 금성면 제오2리, 폭격기 4대 기관총 난사로 17명 사망
- 1950년 7월 봉양면 도원2리 곡현동에서 경찰이 주민 학살
- 1951년 2월 1일 춘산면 금천리, 미군 폭격으로 일가 3명 사망



# 경상북도(남부 지역)

## 김천

- 1950년 김천 형무소 수형인을 구성명 돌고개에 끌고 가 학살
- 1950년 7월 25일 남면 봉천리 봉천천에 미군 전투기 2대가 폭격하여 농소면, 남면에서 16명 희생
- 1950년 9월 29일 감천면 무안리, 미군기 폭격으로 4명 사망, 3명 부상, 마을 전소

## 군위

우보면 이화리에서 보도연맹원 학살

## 칠곡

- 1950년 8월 3일 왜관을 왜관교에서 미군 제1기병사단의 폭격으로 수백 명 사망(미군 증언, AP 보도)
- 1950년 8월경 왜관 낙동강 다리, 약목거리, 왜관을 왜관8리 등 폭격으로 다수 희생
- 1950년 7월의 사흘 동안 신동재에서 헌병대가 보도연맹원 500명 학살
- 1950년 석적지서, 왜관을 인동, 약목면 등지에서 보도연맹원 학살

## 성주

1950년 10월 27일 선남면 낙동강변에서 부역 혐의자 학살

## 고령

- 1950년 9월 1일 우곡면 월오리에서 미군 폭격으로 30여 명 학살
- 1950년 8월 3일 성산면 득성교에서 미군 제14 전투공병대 폭격으로 수백 명 학살(미군 증언, AP보도)
- 1950년 6월 18일 고령을 화천에서 민간인 총살, 전쟁 중 고령군 대곡면 반성2리에서 좌익 관련 예비 검속으로 10여 명 학살

## 구미

- 1950년 7월 30일 원3리에서 미군 폭격으로 민간인 희생
- 1950년 8월 16일 형곡동 사창마을에서 폭격기 8~9대가 폭격, 130여 명 사망
- 1950년 8월 3일 선산-구미 간 도로변에서 미군 폭격기의 폭격으로 5~6명 사망
- 1950년 9월 15일 금전동에서 미군 기총 사격으로 18명 사망
- 전쟁 중, 선산을 이문리 사거리에서 국군이 주민 20~30명 학살

## 대구

- 1949년 3월 18일 상원동 호림부대 및 무장병이 240여 명 학살
- 1950년 7월 중순, 대구 파동 일명서당 앞에서 무장병이 100여 명 학살, 가창면 부근에서 무장병이 100여 명 학살, 대구 형무소 수형인을 군경(특무대, 헌병대, 경찰 등)이 1,402명 학살, 3,500명이라는 주장도 있음
- 한국전쟁 중 군경이 대구 일원에서 272명 학살

## 영천

- 1950년 금호읍, 영천 경찰이 부역 혐의자를 계산골로 끌고 가 학살
- 1950년 6월 초 임고면 수성동에서 백골부대가 게릴라 색출 과정에서 주민 총살
- 1950년 7월경 화산면 당지동 지서에서 경찰이 예비 검속, 화산면 덕암2동에서 보도연맹원 학살
- 1950년 8월경 명산동, 미군기 폭격으로 민간인 희생

## 청도

1950년 음력 6월 2일 이서면 곰티재에서 경찰이 보도연맹원 372명 학살

## 경산

- 1950년 7월 말~9월경 군경이 보도연맹원, 예비 검속자 등 3,500여 명을 평산동 폐코발트 광산에서 학살(경산시 의회 조사보고서)
- 1948년 진항읍에서 경찰이 통비분자 혐의로 주민 죽결 처분
- 1952년 진항면 보인2리에서 경찰이 좌익 경력자 죽결 처분

## 포항

- 1950년 7월 구룡포 고디굴, 학다리굴 폭격, 다수 희생
- 1950년 7월 흥해읍 흥안리, 미군기 22대 무차별 폭격으로 19명 사망, 2명 부상
- 1950년 7월 초 포항, 경주, 영덕 등지의 예비 검속자 200여 명을 포항 경비사령부가 총살 후 수장
- 1950년 8월 12일 북구 송라면 광천리 하천에서 미군 전투기가 피난민에 기총 사격, 40명 사망, 다수 부상
- 1950년 8월 19일 북구 흥해읍 북송리에 미군 폭격기 20대가 무차별 폭격, 32명 사망
- 1950년 8월 북구 월포리, 미군기 폭격으로 다수 희생
- 1950년 9월 1일 북구 여남동 송골계곡, 미군 함대, 경찰기의 무차별 사격으로 수백명 사망 및 부상
- 1950년 9월 8일 북구 청하면 이가리, 호주기의 무차별 사격으로 50여 명 사망
- 1950년 9월 23일 광천리, 미군 폭격으로 32명 사망, 2명 부상
- 1949년 10월 두호동, 용흥동 공동묘지에서 예비 검속자 학살
- 한국전쟁 당시 청하면 미남리, 남로당 활동 혐의로 200여 명 학살

## 경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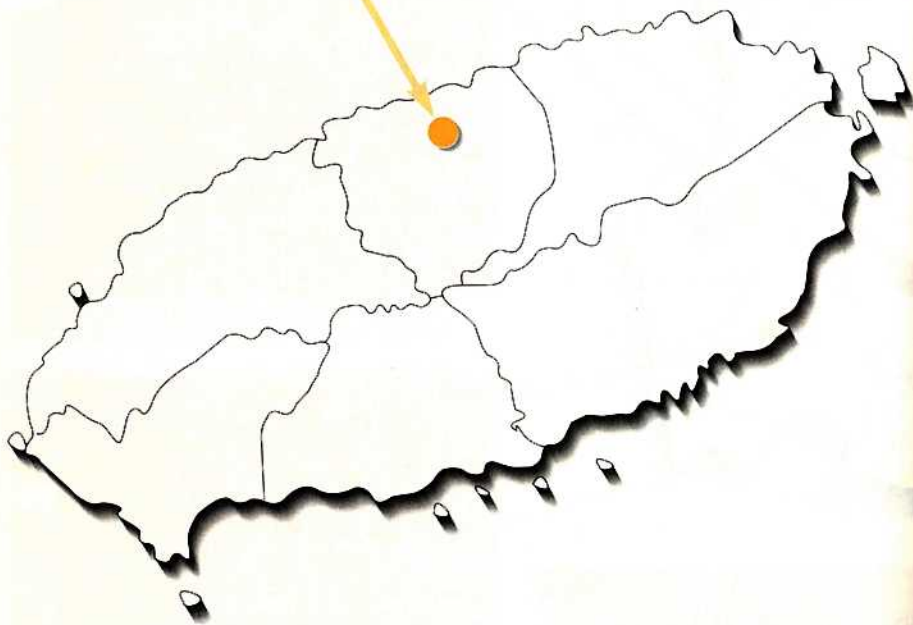
- 1949년 효현동에서 경찰이 좌익 혐의로 민간인 학살
- 1950년 7월 초 효현동 소정2리에서 서북 청년단이 좌익 혐의로 4명 학살
- 1950년 7~8월경 내남동 노곡리 개무덤 계곡에서 보도연맹원 30여 명 학살
- 1950년 8월 다신리에서 미군 기총 사격으로 일가 5명 사망
- 1950년 12월 24일 동방동에서 미군의 무차별 사격으로 민간인 사망



## 제주도

### 제주도

-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경찰, 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 단정 반대를 기치로 내걸고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 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만 명의 민간인이 학살당함
- 1950년 8월 20일 모슬포 주둔군 해병대 제3대대가 송악산 첫알오름 탄약고터에서 보도연맹원 252명 학살



## 제2장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개관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개관

— 강정구(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1. 머리말

우리들 대부분은 남북 이산 가족이 금강산에서 오열하는 기막힌 사연을 보고 이를 내 자신의 일인 양 가슴아파하고 눈물을 적시곤 한다. 그러나 이산 가족은 그래도 오래 살다 보니 만날 수도 있다고 부러워하면서 비참하게 학살당한 가족들 생각에 비통한 눈물을 짓는 술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이들은 한국전쟁 전후 약 100만 민간인 피학살자의 유가족들이다. 이 민간인 대량 학살 문제는 분단과 전쟁의 상흔 가운데 가장 뼈아픈 상처로 남아 있기도 하거니와 반 백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제대로 진상조차 규명되지 않은 채 유족들의 가슴속에 사무친 원한으로만 남아 있다. 더구나 이 학살이 북한에 의해 주도되었다기보다 대부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데 더 큰 문제점이 있다.

이 글은 1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대량 학살 문제를 개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로써 일반인

이 이 기막히고 뼈아픈 상흔을 좀더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늦게나마 커다란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체된 과거 청산을 촉진하는 조그만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2. 민간인 학살의 의미

이 글에서 말하는 민간인 학살은 “아무런 위협이 없는데도 그 저 좌익, 우익, 부역이라는 집합체의 성원(가족을 포함하여)이라는 이유 또는 혐의만으로 무고한 살인을 저지르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교전중의 살인 행위는 제외하며, 재판에 의한 처형 행위는 학살에 포함시킨다. 이는 헬렌 페인이 유엔 협약의 제노사이드(genocide) 정의를 재정의한 “한 집합체 성원들의 생물학적, 사회적 재생산의 정지를 통해 직·간접으로 그 집합체의 신체들을 멸한다는 목적으로 희생자들의 항복 또는 위협의 결여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의해 속행되는 행위”라는 넓은 의미의 정의 가운데 살인 행위에 국한하여 한정적으로 정의한 것이다. 그러나 공비, 통비, 보도연맹원 등을 제외시켜 ‘양민’으로 범주화하는 우리 사회의 통념을 거절하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념을 가졌다고 해도 양민의 범주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으로 정의하여 양민의 범주를 확대하여 민간인으로 통칭한다.

《대한 경찰전사》는 부역자를 이념적 공명과 실천을 함께 하는 적극분자, 반정부 감정 포지자로서 소극적 공산분자, 대세에 부화뇌동하는 소극분자, 강압 밑에 피동적으로 부역한 소극분자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반정부 감정 포지자를 부역자로 분류하는 것은 당시의 경찰이 빨갱이와 부역자를 얼마나 자의적으로 정의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비록 이러한 네 가지 범주



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일반 형법상 범죄 요건이 성립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러한 이념적 지향의 소지 자체가 재판에 의해서든 아니든 유죄 또는 살인의 소지가 될 수 없다고 본다.

### 3. 양민 학살이 아닌 민간인 학살

이제까지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민간인 학살이라는 개념보다는 양민 학살이라는 잘못된 개념을 사용해 왔다. 양민 학살을 굳이 사용하는 것은 거창 학살과 같이 학살당한 자들이 한결같이 아무런 잘못이나 죄가 없이 무고하게 희생된 '양민'이라는 점을 강조하자는 데 있다. 그러나 보편적 인권의 개념에서 이 구별은 용납되지 않는다. 굳이 구별하는 저변에는 양민은 학살되어서는 안 되지만 양민이 아닌 사람의 경우는, 곧 빨갱이 등은 죽여도 좋다는 암묵적인 동조가 깔려 있다.

잘못이나 지은 죄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이들이 법률에 따른 정식 재판 절차에 의해 엄밀히 다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비록 전쟁의 와중이라 하더라도 이는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의 심대한 침해 행위가 된다. 그러나 한국전쟁 전후 이 곳 남한 땅에는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국가의 원시적 폭력이 횡행했다. 설사 반민주 악법인 국가 보안법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식 재판 절차에 의해 사법 처리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학살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이다.

우리는 더 나아가 국가 보안법 자체를 문제삼아야 한다. 사상과 이념의 자유는 천부의 권리이다. 국가 보안법으로 이들을 처벌할 수는 없다. 이들이 형법상의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결코 처벌해서는 안 되는데도 빨갱이라는 이유로 또 빨갱이로 의심을 받아 수십만 명이 정식 재판 없이 학살되는 만행이 대



외세의 개입으로 우리 민족의 비극의 상징이 된 38선

한민국 정부에 의해 저질러졌다. 이제 21세기 초입을 맞아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과거 청산이 시급히 요구된다. 특히 학살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늙고 병들어 세상을 하직하게 되면 100만 명에 이르는 민간인 대량 학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채 역사에 묻힐 위험이 있다.

### 4. 민간인 학살의 기원

왜 이러한 대량 집단 학살이라는 엄청난 범죄 행위가 일어났을까? 이에 대한 기원은 먼저 해방 후 전개된 민족 분단과 한국 전쟁에 기인한다. 만약 미국이 강제적으로 조선을 38도선으로 분단시키지 않았다면 한국전쟁이 일어났을까? 또 한국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민간인 학살이라는 범죄가 일어났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단연코 '아니다'일 것이다. 그러므로 민간인 학살의 기원은 해방 후 조선을 분단한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곧 미국이 조선의 내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민족 분단도, 한국 전쟁도, 민간인 학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소련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만 CNN이 6·15 공동 선언 이후 밝힌 것처럼 절대적인 책임은 미국에 있다.

그러나 미국의 주도에 의해 한반도가 분단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민간인 학살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 텐데 왜 이 땅에서는 이러한 만행이 일어났을까라는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 또한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지고 양쪽이 전쟁까지 치렀는데 북한은 민간인 학살을 적게 저지른 반면에 왜 민주주의를 한다는 남한은 오히려 훨씬 많은 학살을 저질렀느냐는 의문이 든다.

이 의문에는 해방 직후 들어선 미국 점령 및 미 군정과 이승만 정부의 정통성이 자리잡고 있다. 곧 정부가 정통성이 없기에 국민의 자발적 지지가 빈약했고, 따라서 정부는 폭력으로 국민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폭력이 무자비하게 행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무자비한 국가 폭력은 미 군정 초기 때부터 자행되고 이를 이승만 정부가 이어받았다.

해방 직후 미국은 조선의 남쪽 절반을 점령하고 나서 전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여의치 않자 조선을 분단시켜 그 반쪽만이라도 지배하려 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남한에 군정을 실시하고, 친일파를 대거 기용하고, 일본 식민지가 남겨 놓은 법과 제도의 대부분을 그대로 조선인을 통치하는데 사용했다. 이렇다 보니 미 군정에서 가장 힘센 경찰이 온통 친일파 일색이었고 이들의 횡포가 극에 달했다. 이 분단 획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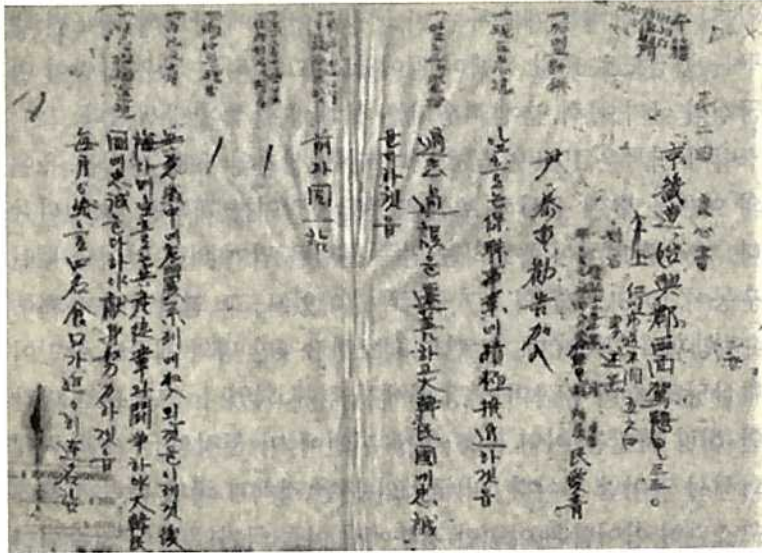
일본 식민 잔재를 계승하는 미 군정의 정책에 항거해 1946년 대구를 중심으로 10월 항쟁이 일어났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미 군정의 국가 폭력 앞에 희생되는 첫 대량 살상이 발생했다.

이어 미국은 1948년 남한만의 단독 선거인 5·10 선거를 유엔의 이름을 빌어 강행해 조선을 분단시키려는 계획을 밀고 나갔다. 이러한 미국이 주도하는 민족 분단을 막기 위해 일어난 통일 운동이 1948년 2월의 2·7 구국투쟁이었고, 그 연장선에서 제주 4·3 항쟁이 일어났다. 그 결과 최소한 3~4만 명의 제주도 주민이 학살당하는 비극을 미 군정 하에서 겪게 되었다. 그러므로 민간인 대량 학살은 이미 6·25 전쟁 이전에 미 군정의 국가 폭력에 의해서 일어난 셈이다. 미 군정의 분단 정책과 국가 폭력 정책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이승만 정부에서 이들 국가 폭력이 지속되리라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었다.

여기에서 이승만 정부를 출범시킨 5·10 단독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정권을 창출시킨다는 선거의 보편적 원칙을 위배한 선거였고, 분단을 마무리짓는 일이었기에 당시 국민들의 지지를 거의 받지 못했다. 그 결과 당시 400여 개의 정당 사회 단체 가운데 5·10 선거에 참여한 정당 사회 단체는 겨우 10% 정도인 40여 개에 불과했다. 곧, 모든 좌익 정당 사회 단체, 김규식 등의 모든 중도파 정당 사회 단체, 김구를 중심으로 한 상해 임시정부 등의 우익 세력 등이 모두 대한민국 정부를 출범시킨 첫 선거인 5·10 제헌의회 선거를 분단 선거로 보고 참여를 거절했다. 그 결과 친일파 정당이고 미 군정의 여당이었던 한민당, 이승만의 독립 축성회, 서북 청년단과 같은 폭력 단체, 반공 단체 등만이 선거에 참여해 5·10 선거는 10%만의 절름발이 선거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과정을 겪고 미 군정의 절대적인 비호 아래 출범한 이





국가 보도연맹원 원서

승만 정부는 그 성격상 국민의 자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여기에다 미 군정이 취한 민족 분단 정책, 미국식 자본주의(당시 여론 조사는 주민들 77% 정도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원했고, 14%만이 자본주의를 원했다.), 친일파와 민족 반역자 중용, 통일 세력 탄압, 노동자 등 민중 탄압 등의 정책을 고스란히 이어받았기에 이승만 정부가 제대로 된 정통성을 누릴 수 없었다. 그 결과 여순항쟁을 계기로 1948년 12월 1일 국가 보안법을 제정해 한 달 남짓 사이에 무려 11만 명을 체포 구금했고, 30만 명 이상의 보도연맹을 만들어 이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탄압하게 되었다. 이로써 이승만 정부 아래에서도 미 군정처럼 국가 폭력이 연속적으로 난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6·25 전쟁이 일어나 이승만 정부의 존망

여부가 경각에 달려 있었다. 정통성이 없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이승만 정권은 무력 일변도의 강제력을 행사해 정권을 유지하려 했고, 그 결과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거나 걸림돌이 되는 집단이나 사람들을 비상 시국을 빌미로 대량 살상하게 되었다. 여기에다 이승만 정부를 뒷받침하고 있는 군과 경찰의 특성 때문에 민간인 대량 학살이 더욱 증폭되었다.

군과 경찰이 대부분 친일파와 민족 반역자로 채워져 있어 만약 통일 정부가 들어서면 이들은 숙청 제1호로 처단될 운명에 놓여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극단적인 학살극을 자행한 측면이 짙다. 또한 전시 작전권을 이양받은 미국은 이승만 정부의 군과 경찰이 저지르는 민간인 대량 학살에 대한 통제력을 옹당 발휘해 이를 막아야 하는데도 자신들의 임무와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 노근리 학살과 같이 민간인 학살의 주체가 되었기에 민간인 학살은 더욱 증폭되었다.

결론적으로 민간인 대량 학살이라는 반인륜적 범죄는 미 군정의 조선 점령 정책에 그 기원을 두고 있었으며, 이 점령 정책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정통성을 갖추지 못한 이승만 정부에 의해 6·25 전쟁 중에 주도되었고, 이승만 정부의 군과 경찰을 구성하고 있던 대부분의 친일, 민족 반역자들에 의해 증폭, 자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작전권 소유자인 미국의 방기 및 방조로 악화되었다. 물론 이들 외에도 6·25 전쟁에 참전한 미군, 북한 인민군, 지방 좌익분자, 민간인 이념 단체 등에 의해서도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었다. 또 북한 지역을 40여일간 점령하면서 미군과 국방군에 의한 학살도 자행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규모나 정도는 이승만 정부의 체계적인 대량 학살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에 자세한 논의는 생략한다.



## 5. 민간인 학살의 유형과 특성

민간인 학살은 그 수가 무려 100만 명에 이르고, 연대기적으로는 제주 4·3 항쟁에서 6·25 직후까지, 피학살자는 남녀노소를 비롯해 좌익 및 우익에서부터 여기도 저기도 속하지 않은 일반인까지, 학살 주도자는 미군에서부터 민간인까지, 장소로는 남과 북, 산과 들, 강과 바다까지, 학살 수단은 총살, 작살, 참수, 수장, 생매장 등에 이른다. 이렇게 얽히고 설킨 민간인 학살을 몇 가지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민간인 학살의 윤곽을 좀더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래와 같이 유형별로 그 특성을 살펴본다. 이 유형별 분석은 주로 남한 땅에서 저질러진 민간인 학살을 대상으로 한다. 북한 지역은 이러한 유형별 분석보다는 전반적인 양태를 서술적으로 제시하면서 자료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유형별 분석을 시도하겠다.

### 1) 연대기별 학살

#### ① 작은 전쟁 기간의 학살

소규모 학살은 미 군정이 시작되면서 곧바로 일어났지만 체계적이고 계획적이며 본격적인 대량 학살은 1948년 2월 5·10 단독 선거를 분쇄하여 민족 분단을 막고 통일 국가를 수립하기 위하여 무력 투쟁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2·7 구국투쟁이라는 '작은 전쟁'에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부터 시작해 4·3 항쟁에서 무려 3~4만 명의 대대적인 학살이 미 군정과 이승만 체제 아래에서 일어났고, 이의 연장선상에서 1948년 10월 여순항쟁이 일어나면서 다시 대대적인 학살이 전개되었다. 여수, 순천, 구례, 곡성, 광양 등 유격 전쟁이 본격화되는 지리산 주위에서 이미



제주 4·3 항쟁 당시 희생된 사람들의 유골(다량취골)

6·25 전쟁 이전에 민간인 학살이 공비 토벌이라는 이름 아래 대대적으로 펼쳐졌다. 1949년부터 본격화된 유격대 소탕전 과정에서 구사된 견벽청야 작전 등으로 주로 문경과 같은 산간 지역 주민들이 학살당했다.

#### ② 6·25 전쟁 초기의 학살

6·25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즉각 개입한 미국이 공중 폭격을 시작하면서 이리 철도역과 같은 학살이 곧바로 시작되고, 지상군의 본격적인 전쟁 수행 과정에서 노근리 학살과 같은 미군에 의한 학살이 자행되었다. 그러나 가장 끔찍한 대량 집단 학살은 보도연맹원에 대한 학살이다. 7월부터 전국적으로 30여 만 명에 이르는 이들 보도연맹원에 대한 학살이 자행되어 그 피해가 최



소한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이후 학살의 악순환을 일으키는 원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승만 정부의 최 고위 관계자, 곧 이승만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전쟁의 수행 과정에서 각 지역에서 예비 검속이란 이름으로 좌익 성향으로 의심이 가거나 군경에 비협조적인 사람들이 대상이 되어 구금되고 살해되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형무소의 기결 및 미결 수인들이 대대적으로 학살당한다.

보도연맹원에 대한 초기의 집단 학살은 그 이후 연쇄 학살의 고리를 만들게 되어 북한이 점령한 지역 내에서 보도연맹 관련 피학살자 가족에 의해 군, 경찰, 공무원 등과 가족에 대한 보복 학살이 이루어졌다. 또한 인민군이 점령하면서 친미주의자와 반동 및 민족 반역자에 대한 학살이 이루어졌다.

### ③ 6·25 전쟁 후기의 학살

9·28 서울 수복을 계기로 주 전선이 북한 지역으로 옮겨가고 전쟁이 후기로 접어들면서 민간인 학살은 북한과 남한을 통틀어 전개되었다. 제일 먼저, 퇴각하는 인민군에 의해 형무소에 수용된 우익분자나 악질 반동분자 등에 대한 학살이 진행되었다. 이후 국군이 복귀하자 인민군 치하에서 인민군에 부역한 사람에 대한 학살, 좌익에 의해 학살된 유가족의 역 보복 학살이 줄을 이었다. 이어 빨치산 활동이 왕성했던 지리산 등 산간 지역의 토벌 작전 과정에서 일어난 제2전선에서의 민간인 학살, 중국군의 참전을 계기로 급조된 국민 방위군 장병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5만여 명이 죽임을 당한 후반기의 대표적 학살이 자행되었다.

북한 지역의 경우, 미군과 남한 군경에 의한 40일간의 강점 기간 동안 자행된 민간인 학살과 전쟁이 소강 상태로 접어 든 이후 주로 미군의 초토화 작전에 의한 대대적인 민간인 학살이 진행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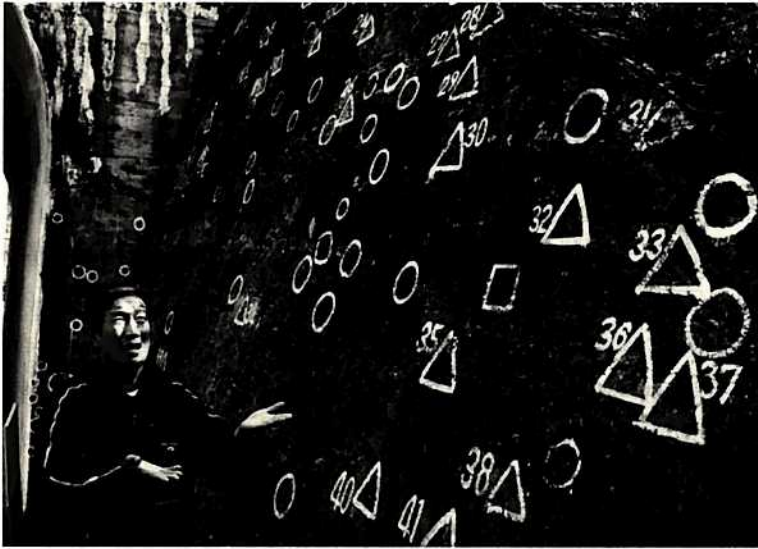
### ④ 전쟁 소강기의 북한 민간인 학살

1951년 초여름부터 전선은 대체로 38선을 경계로 소강 상태에 빠졌다. 비록 지상전 전투는 소강 상태였지만 공중전과 해상전에서 절대 우위를 지키고 있던 미군의 공습이나 함포 사격 등이 계속되어 전선 아님 후방 북한 주민들이 학살되었다. 동해안 최대 도시인 원산의 경우 미 해군이 정전 1분 전까지 폭격을 계속해 현대 미 해군 역사상 최장일인 861일 동안 포위 공격한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 결과 최소한 수십만의 북한 주민이 학살되

미 해군은 정전 1분 전까지 원산을 폭격했다.







미군이 기총 사격을 가한 노근리 현장

고 기타 전투 행위 중에 사살된 북한 주민 등을 합쳐 전체 사망자는 북한 인구의 12~15%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 학살 주체별로 본 민간인 학살

학살 주체는 남한 측은 미군, 국방군, 경찰, 서북 청년단과 같은 비정규 무장대로 대별할 수 있고, 북한 측은 인민군을 주축으로 한 북한 점령 기관 일반, 빨치산, 지방 좌익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들 각 주체별로 학살의 양태나 특성을 살펴보겠다.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남한의 경우 피난민이 주된 대상이었고, 학살 행위는 주로 비행기의 기총소사에 의한 것이었으며, 때로는 노근리와 같이 직접 피난민을 적으로 간주하여 직접적인 기총 사격을 가하는 형식이었다. 시기적으로는 주로 전쟁

초기의 전선 주위에서 많이 이루어졌고, 전쟁 후반기에는 북한 지역에 집중하여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졌다. 북한을 점령한 40일 동안은 야만적이고 직접적인 학살을 자행했고, 후반기에는 주로 북한 전역을 무차별 폭격하여 초토화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북한 주민에 대한 대량 학살을 감행했다. 미군의 민간인 학살은 인종주의가 결합되어 상층을 기한 것이 특징이다.

국방군은 전선과 비전선에서 학살을 자행했다. 전선 학살의 초기에는 주로 남부 전선에서 예비 검속 등에 의해 좌익 의혹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군경 합동으로 학살을 저질렀다. 후기에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제2전선 지역에서 11사단 중심의 유격대 토벌 과정에서 대량의 산간 주민을 집단 학살했다. 이들의 학살은 6·25 전쟁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11사단의 작전 지시가 산간 지역의 모든 주민을 적으로 간주한 것이어서 민간인 학살은 구조적으로 발생되게 되어 있었다. 비전선에서의 학살은 보도연맹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전역에 걸쳐 부역자나 공비 및 통비분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다. 이 과정에서 군의 특무대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특무대장인 김창룡은 공산당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양민 열 명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무차별 학살은 예정된 것이었다. 부산의 전 기구를 세 차례나 검속하여 수만 명을 학살한 혐의는 사실에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경찰 역시 군과 같이 대부분 일제 치하의 일본군이나 경찰 출신으로 반공에 운명을 걸 수밖에 없는 인적 구성을 가진 집단이므로 군과 동일한 학살을 저질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경찰은 집단적 학살 못지않게 개인적 수준의 학살이나 만행이 많았다. 물론 군경 모두 자의적으로 학살 만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근거는 이승만의 '특별 조치령'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비정규 무장대에 의한 학살은 악명 높은 서북 청년단, 2300명 이상을 학살한 것으로 알려진 강화 향토방위 특공대, 1,000여 명이 희생된 고양 금정굴 학살을 주도한 우익 비밀 결사체인 태극단과 치안대, 경북 월성군 민보단(단장 이협우) 등 각 지역마다 조직되어 있는 자경단이나 치안단 등에 의해서 저질러졌다. 제주 4·3 항쟁에서 서북 청년단이 야만성과 무법성으로 악명을 떨친 것처럼 이들의 악명은 경찰과 군 못지않게 널리 알려졌다. 위의 이협우는 1949년 칠석날 빨갱이를 원조한다는 허위 보고를 받고 어린이가 대부분인 김하중 일가 8명을 학살하고 재산 100마지기를 빼앗았고, 1950년까지 살인, 방화, 재산 약탈을 일삼아 그 희생자가 200명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그는 자유당 공천으로 3선 의원이 되었으나 4·19 이후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 경우 특히 재산 갈취나 여자 관계 등을 목적으로 한 학살이 많았다.

북한 측의 학살 주체는 인민군을 중심으로 한 북한 정권 기관, 빨치산, 지방 좌익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인민군 중심의 정권 기관은 북한 법에 의거하여 재판 절차를 밟아 반동에 대한 처형을 감행하는 절제된 형식이었다. 또 공식적으로 만행을 금지시키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인천 상륙작전 이후 후퇴하는 과정에서 법과 재판 및 절제적 처형은 지켜지지 않고 형무소 및 유치원에 수감된 우익 반동을 학살하는 만행이 자행되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대전 형무소에 수감된 1,300명에 가까운 '반동분자'들에 대한 학살이다. 지방 좌익은 대부분 보도연맹원 학살 피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보복 감정에 치우쳐 인민군 진주 직후 보복 학살을 주도했다. 빨치산도 토벌대에 비해 학살이나 만행을 자제했지만 때로는 산간 마을 민간인에 대한 학살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남과 북은 민간인 학살이라는 측면에서 대조적인 차이를 보이



고양 금정굴 피학살자 유골 발굴 현장

고 있다. 북한은 상대적으로 정권 기관 차원에서는 재판과 법률에 의거한다든가 고문을 금지시키는 등 절제된 모습을 보였지만 지방 좌익이나 빨치산이 오히려 더 야만성과 비적법성을 드러내 보였다. 반면 남한의 경우는 공권력인 군과 경찰이 비정규군 못지않게 비적법성과 야만성, 조작성, 무차별성 등을 드러냈다. 이들 북한 측 학살 주체에 의해 저질러진 피학살자 수는 정부의 공식 주장인 12만 9,000명 선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수적으로 남한 정부나 비정규 무장 단체에 의해 주도된 100만 명보다 훨씬 적다.



### 3) 피학살자별로 본 민간인 학살

피학살자는 평택 이남의 보도연맹원, 형무소 수감자, 제2전선 지역 주민, 피난민, 부역 혐의자, 공비 및 통비 혐의자, 국민 방위군이나 불심 검문 또는 가택 수색에 의해 뚜렷한 혐의도 없이 학살의 대상이 된 불특정 다수 민간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보도연맹원 학살은 이승만 정부 최고위층의 명령에 의해 전국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행해져 피학살자만 해도 20~25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적이고 체계적인 6·25 이후 최초의 학살이었다. 이것이 불씨가 되어 보복 살인의 연쇄 고리가 형성되었다. 형무소 수감자의 학살 또한 최소 1,800명이 학살된 대전 형무소의 예에서 확인되었듯이 최고위층의 명령에 의해 진행되었고 전국적으로 행해졌다. 그 수는 최소 2만 명으로 추정되나 미결수를 포함할 경우 1~2만 명이 더 추가될 수도 있다. 이들에 대한 학살 주체는 공권력인 군과 경찰이었다.

피난민은 미군에 의해 학살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북한에서 월남한 피난민은 군과 경찰이 자의적으로 학살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 피난민은 불특정 다수로서 언제나 군과 경찰 및 비정규 무장대의 부역 혐의자로 표적이 되어 무고하게 학살되는 경우가 많았다.

제2전선 지역 주민은 언제나 공비와 통비 및 부역 혐의자로 몰려 학살에 내몰렸고, 아예 11사단의 작전 명령은 '작전 지역 내에 있는 사람 전원 총살'로서 산간 지역 주민들을 모두 통비로 보고 학살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제2전선 주민들은 아마도 보도연맹원의 학살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학살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좌익에 의한 피학살자는 주로 그들이 분류한 반동분자인데 이



대구 형무소 재소자들의 학살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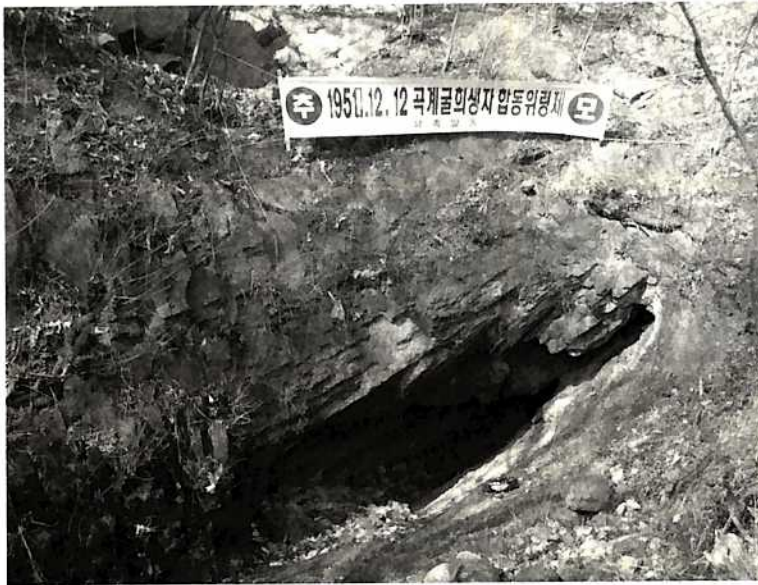
들은 주로 친일파, 친미파, 민족 반역자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이 밖에도 경찰관, 반공 연맹원, 국민회 지부장, 군인 가족 등을 지칭한다. 남한 당국의 공식적인 피학살자 수는 12만 9,000명에 이른다.

북한 지역의 피학살자는 북한 전역에 걸친 불특정 다수 인민들로 미군의 초토화 작전에 수십만이 희생되었다. 또 40일 동안 미군이 북한을 점령한 시기에는 주로 노동당이나 정부 기관에 종사한 사람과 좌익 혐의자들이 학살당했는데, 북한의 공식적인 발표로는 약 17만 2,000명으로 알려져 있다.

### 4) 학살 행위 유형별로 본 민간인 학살과 학살의 야만성

학살 행위 유형에는 총살, 생매장, 초토화 작전, 수장, 일본도에 의한 참살, 굶겨 죽이기, 때려 죽이기, 폭격이나 비행기의 기총소사 등이 있다. 초토화 작전과 비행기의 기총소사 등은 주로 미군에 의해 사용된 학살 방법이다. 미군은 제주 4·3 항쟁 때부터 초토화 작전을 시도했으며 실제 4·3 항쟁에서 약 130개의 마





충북 단양 곡계굴, 미군 폭격 학살지 입구

을이 초토화되었다. 11사단을 중심으로 한 토벌대 역시 전벽청야라는 초토화 작전으로 양민을 학살했다. 수장은 주로 부산이나 통영 등 해안가에서 많이 사용되었고, 일본도에 의한 참수는 당시 일본군과 경찰에 복무했던 김종원과 같은 친일파 분자들에 의해 보복성과 야만성을 과시하기 위하여 애용되었다.

학살 자체가 야만성의 발로지만 상상을 초월한 극도의 야만성을 보여주는 사례를 제시하여 한국전쟁이, 특히 이승만 정권 의해 저질러진 민간인 학살이 얼마나 더러운 만행이었는지를 보겠다. 여기서의 야만성은 주로 인륜적 기준에 의한 것에 중점을 둔다. 전쟁에는 많은 야만성과 비극을 가져오지만 특히 연약한 부녀자와 어린이 및 노인에게 이 야만성이 집중된다.

먼저 부녀자에 대한 강간 등 능욕과 관련된 야만성이다. 좌익

으로 몰린 경남 진영의 한 여교사는 얼굴이 예쁜 젊은 처녀들과 함께 능욕당하고 암매장되었는데, 그녀는 다리까지 잘렸다. 또 충무, 통영군의 남녀 800여 명에 대한 학살은 헌병부관들이 부녀자 약탈의 은폐책으로 빨갱이로 몰아 수장한 사건이었는데, 당시 그들은 창고에 끌려가 남녀 모두 옷을 벗긴 채 구타당했다. 전북 남원군 대강면 강석리에서는 11사단 205부대가 마을 주민 60여 명을 살해하고 부녀자 7명을 끌어내어 대검으로 목과 유방, 심지어 음부까지 난자하여 모두 죽였다. 그리고 19명을 일본도로 참수했는데, 한 장교가 김점동이란 사람을 일본도로 목을 두 번이나 내려쳤는데도 죽지 않자 “더러운 놈, 모가지가 왜 이렇게 질겨.” 하면서 세 번째 내리쳤다. 경남 창원군 북면에서도 해군 첩보대 대장 황광수 등이 이 곳 주민과 피난민 60명을 빨갱이로 몰아 살해하면서 어린이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일본도로 내리쳐 죽이고, 부녀자들 젖가슴을 칼로 자르고 팔다리를 절단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충남 아산군 신창 지서주임이던 유해진은 마을 부녀자를 농간하고, 부하까지 농간하게 하고, 좌익 측 부녀자를 첩으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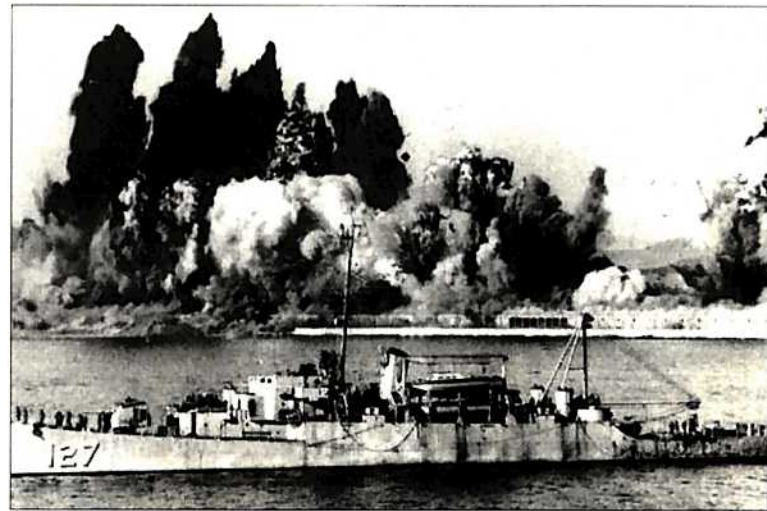
이제 인간으로서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반인륜과 패륜 행위를 살펴보겠다. 이에는 6·25 전후 가장 악명을 떨치던, 일본군 출신으로 이승만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았던 김종원이 대표적이다. 그는 여수 등지에서 일본도로 사람을 참수하기를 즐겼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1950년 5월 6일 백골 부대를 이끌고 거제도 일운면 구조리 앞바다에 주민 1,000명을 1시간 동안 찬물에 세워 놓고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등 서로 어려운 사이를 골라 마주 보고 뺨을 때리게 했다. 만약 세계 때리지 않으면 짐승처럼 개머리판과 몽둥이로 난타했다. 이 같은 ‘뺨때리기’와 ‘말태우기’는 흔히 자행되던 보편적인 일이었다. 제주에



서는 토벌대가 주민들을 모아 놓고, 시아버지를 엎드리게 하고 며느리를 태워 빙빙 돌게 하고, 할아버지와 손자를 마주 세워 놓고 서로 뺨을 때리게 했다. 총살에 앞서 총살당하는 이의 가족들을 앞에 세워 놓고 그가 총에 맞아 쓰러질 때 가족들에게 만세를 부르게 하기도 했다.

경남 통영에서는 죄 없는 양민 수십 명을 창고에 가두어 놓고 강제로 정교를 맷게 하고는 수장시켜 죽였다. 육군 상사였던 이의 전언에 따르면, 시숙과 제수를 옷을 벗겨 강제로 정교를 맷게 하고는 멍석에 말아 굴리는 반인륜적인 만행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다고 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가공할 야수적 행위는 이미 제주에서부터 알려졌다. 처녀와 총각을 불러내어 서로 정교를 강요했고, 장모와 사위를 대중 앞에서 정교를 맷게 하고는 쏘아 죽이기도 했다. 전남 완도읍 두암리에 살던 좌익 아들을 둔 할머니의 이야기는 더욱 기가 막힌다. 경찰이 할머니의 아들을 죽이고는 간을 꺼내 할머니 입에 물려 마을을 돌아다니게 했던 것이다. 할머니는 반 미친 상태에서 경찰이 시키는 대로 했고, 13년형을 언도받아 7~8년 복역 후 석방되었으나 몇 달 후 죽었다고 한다.

이러한 반인륜적 행위가 단지 6·25 때문에 발생한 것만은 아니다. 이미 일본 군국주의의 악랄한 인권 말살주의에 물들어 있던 친일파, 곧 민족 반역자들이 반공 제일주의를 걸었던 미 군정과 결합하여 그들의 생사를 걸고 남한 사회의 권력을 장악하면서부터 구조적으로 잉태되었다. 실제로 미 군정 당시에도 마크게인의 '일본 일기(Japan Diary)'에 서술되어 있듯이 경찰이 유사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물론 6·25 이전에도 4·3 항쟁과 여순항쟁에서 보듯이 토벌대의 만행은 다반사로 자행되었다. 단지 6·25 이후 좀더 대규모로 또 빈번히 일어났을 따름이다.



미 해군의 흥남 폭격 장면

##### 5) 남북의 민간인 학살 양상의 상호 비교

여기서는 북한 정권과 남한 정권의 민간인 학살 정책에 대한 비교와 민간인 학살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대조적인 특성 등을 제시한다. 상호 비교는 학살의 양적 규모, 재판 등 법적 절차, 정부의 공식 정책 등에 대한 단편적인 비교에 한정한다.

먼저 양적인 비교를 해 보겠다. 남한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은 이승만 정권에 의한 학살이 100만 명 수준, 좌익에 의한 학살이 공식적으로는 12만 9,000명 수준이나 이는 과장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미군에 의한 학살 규모는 알 수 없다. 편의상 노근리 정도의 학살이 현재까지 접수된 60여 곳에서 자행된 것으로 간주한다면 수만 명 수준이다. 그러나 외지 피난민이 미군의 폭격에 의해 학살된 경우에는 제대로 알려지기가 힘들고, 토착민이 학살된 경우도 도시화, 산업화, 고령화, 당사자의 사망 등



으로 보고되지 않아 규모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북한 지역에서는 미군과 국방군 등에 점령당한 40일간에 자행된 학살이 공식적으로 17만 2,000명에 이른다. 북한 정권과 중국군에 의한 북한 양민의 학살은 제대로 알려진 것이 없다. 물론 중국군은 남한 내에서도 민간인을 학살한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노근리 같은 민간인 학살 사건이 일어났다고 강변하는 상황 논리는 중국군과 비교하면 터무니없는 주장임이 여실히 입증된다. 수천 명의 남북 이산 가족을 찾아준 전총림의 누님은 “중국군은 군기가 엄해서 부너자하고는 별로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아이들하고는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그들에게는 예전 만주 땅에서 보았던 장개석 군대의 포악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죠.”

전쟁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북한 전역에서는 미군의 초토화 작전으로 엄청난 민간인이 학살되었다. 앞에서 보았지만 신의주의 경우 주민 20만 명의 2/3가 미군의 야수적 폭력에 의해 학살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북한 전역에서 학살된 민간인 수는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남한의 경우 정부의 공식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이승만의 특별조치령이나 거창 사건 등에 대한 그의 담화, 11사단의 작전 지시 등은 학살을 만연하게 하는 원초적 요인이었다. 북한의 경우 친일파, 친미파, 악질 반동 등을 북한 법과 재판에 의거해 처단하게 규정되어 있고, 고문 등을 금지하라는 내무서 지시 사항 등을 볼 때 절제된 학살이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북으로 후퇴하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군과 남한군이 북한을 점령한 약 40일 동안 미군 등을 도운 혐의를 받은 북한 ‘부역자’의 경우도 남쪽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이들에게는 협력 정도에 따라 3개월, 6



북한 지역에서는 미군과 국방군 등에게 점령당한 40일간 자행된 학살이 공식적으로 17만 2,000명에 이른다.

개월, 1년 두문불출 등을 적용시켜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처벌 위주였고, 학살과 같은 무절제한 보복 살인은 드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간인 학살 자체가 대부분 국가 폭력에 의해 일어날 수밖에 없었으나 폭력 행사의 적법성, 야만성, 강도 등에서 남북간의 차이가 컸다. 남의 경우 고삐 풀린 국가 폭력이라면 북의 경우는 그나마 절제된 폭력이었다.

전시에는 개인적 수준에서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 중요한 것은 이들 범죄 행위가 공식 집단에 의하여 얼마나 조직적으로 조장, 묵인된 가운데 행해졌느냐는 점이다. 남북의 대조적인 점은 북은 미국의 ‘범죄 행위’에 대해

세계 여론에 공식적으로 호소하여 그 진상을 공개적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했고, 또 실제로 국제적인 조사가 진행된 반면에 미국이나 남한은 북한의 학살 만행을 말로는 규탄하면서도 국제 진상 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남북 간의 이러한 차이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일본군 출신 위주로 구성된 남한군의 태생적 한계와 항일 유격대 출신 위주로 구성된 인민군의 태생적 인민성 등도 분명 중요한 결정 요소였을 것이다.

### 제3장

## 대다수 국민이 잠재적인 적





## 대다수 국민이 잠재적인 적

### 1. 한국전쟁 이전의 민간인 학살

— 이영일(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

한국전쟁 이전에 저질러진 민간인 학살을 작은 전쟁기의 학살이라고 하며, 한국전쟁의 리허설(예행 연습)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한국전쟁의 시발은 엄밀한 의미에서 1950년 6월 25일이 아니라 1948년 5·10 단독정부, 단독선거를 무산시키고 미 군정과 이승만과 한민당 등 분단 세력에 맞서 공식적으로 무력 투쟁을 전개하여 통일을 이루려는 2·7 구국투쟁부터라는 것이다. 한국전쟁의 첫 단계인 작은 전쟁 기간은 주로 제주 4·3 항쟁이나 여순항쟁과 같은 인민 항쟁, 유격대 투쟁, 38선상의 남북 충돌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이 기간에 10만 명에 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민간인 학살은 주로 남부지방인 제주도,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지역에서 인민 항쟁 과정이나 1949년부터 본격화된 유격대 소탕전 과정에서 구사된 견벽청야 작전 등에 의해 발생했다. 이에 대한 상황을 지역별로 포괄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제주 지역의 민간인 학살

정부 수립 직전인 미 군정기에 제주도에서 발생한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 3·1절 행사에서 발생한 경찰 폭력을 기점으로 다수의 제주도민이 사망한 것이 계기가 되어 1948년 4월 3일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서 시작되었다. 그후 1948년 10월 미군 주도의 군경과 서북 청년단 등에 의한 대대적인 초토화 작전이 전개되고, 1954년 9월 21일 제주도에 내려진 계엄이 해제되기까지 무장 세력 진압 과정 중에 불법 학살이 무자비하게 자행된 결과, 당시 제주도민 전체 인구의 10%에 가까운 3만 명이상이 무차별 학살되는 참상을 겪은 민간인 학살 사건이다.

#### 제주 4·3 항쟁

해방 후 한반도의 남쪽 땅에서는 미 군정이 실시되었는데, 당시 제주도 인구는 30만 명이었다고 한다. 제주 4·3의 도화선은 1947년 3월 1일 제주 읍내에서 3·1절 시위 군중에게 경찰이 무차별 발포하여 14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비롯되었다. 사상자 대부분이 학생, 부녀자, 농부 등의 관람 군중이란 사실이 밝혀지면서 제주도민들은 격분했다. 제주도민들은 이 사건의 진상 규명과 발포 경찰의 처벌을 요구했고, 3월 10일 경찰 및 사법기관을 제외한 도청 등 제주도내 165개 관공서, 국영 기업, 단체들이 항의 파업을 하고, 도내 전체 초·중등학교가 항의 휴교를 했으며, 상점들이 이에 동참했다.

그러나 미 군정과 조병옥 경무부장은 3·1절 사건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본토의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시작했다. 본토에서 파견된 응원 경찰과 서북 청년단원들은 '빨갱이를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검속 한 달